

새 정부 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지원체계 혁신 방향 토론회

◀ 2017. 12. 7.(목) 14:00 - 17:30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새 예술정책 수립 TF
(예술지원체계 분과)



CONTENTS

새 정부 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지원체계 혁신 방향 토론회**

1부 발표

- 07 **1주제 / 예술지원의 현실과 지원체계 혁신 방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 19 **2주제 /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과 예술지원기관 혁신 의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
- 43 **3주제 / 예술지원 협치체계 재구성 방향**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2부 토론

- 59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65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81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 87 이동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 93 임인자 (독립기획자,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새 예술정책 수립 TF
(예술지원체계 분과)

새 정부 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지원체계 혁신 방향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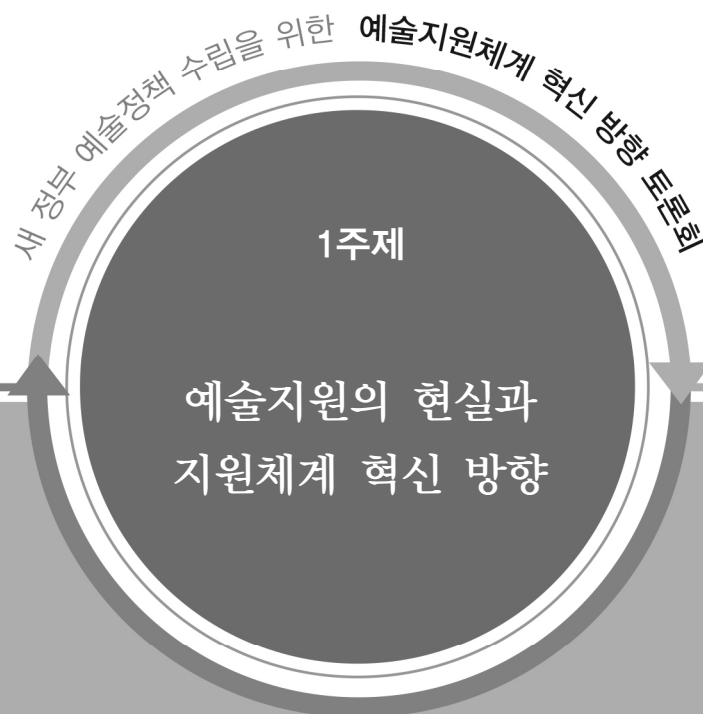
일시 2017년 12월 7일(목) 14:00 ~ 17:30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새 예술정책 수립 TF (예술지원체계 분과)

프로그램

14:00 ~ 14:10	행사 소개 및 개회	
1부 발표		
14:10 ~ 15:10	전체 진행 / 1부 사회: 라도삼 (새 예술정책 TF 예술지원체계 분과위원장,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주제 / 예술지원의 현실과 지원체계 혁신 방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2주제 /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과 예술지원기관 혁신 의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3주제 / 예술지원 협치체계 재구성 방향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15:10 ~ 15:30	휴식	
2부 토론		
15:30 ~ 16:25	사회: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이동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임인자 (독립기획자,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16:25 ~ 17:00	플로어 토론 (청중 참여)	
17:10 ~ 17:30	종합정리 및 폐회	



1부 / 발표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1.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

“오히려 재난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강렬한 연대 의식을 경험하며,
그러한 경험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 약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_ 레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① 부패정부들의 이념과 이권에 기반한 문화예술계 통치 계획 수립 및 추진

- 이명박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 08)
-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2013. 03)
- 비판적 주체에 대한 차별과 배제
- 관변 주체에 대한 선택과 육성

② 국가 조직 전체를 동원한 문화예술계 검열 및 통제 시스템 운용

- 국정원 개혁위원회 보도자료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2017. 10. 30)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입수 자료 분석> (2017. 10. 30)
- 청와대+국정원+경찰+문화부 등 국가 조직의 협력을 통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
- 문화부와 문화분야 주요 공공기관(지원기관)들의 전면적인 공모 및 협력 체계 구축
-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 창작에도 공작 정치 진행
- 청와대가 국정원, 문화부 등에 지시하여 문화예술인 약 8,500여명의 개인정보(정치적 견해 등 개인의 민감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취합하고 검증. 청와대, 국정원, 문화부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8,500명 중에서 348명(야당 지지자, 정부비판 및 시국선언 참가자 등)을 ‘문제인물’로 선별하여 집중 관리. 개인

외에도 주요 단체들 블랙리스트 작성하여 관리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정원과 문체부는 2014년 2월부터 ‘문예기금 지원’ 관련 인물 검증을 시작하였는데, 관련 지원 절차로는 국정원의 문체부 담당 I/O가 문체부에서 검증요청 명단을 문서 또는 이메일 편으로 받은 후* 초기에는 종이 문서형태로 문취편을 통해 받다가 이메일로 전환

국정원내 관련부서에 명단을 보내 지휘부 보고를 거쳐 대상자의 시국선언 참여·국보법 위반 前歴 등 확인하여 신원특이사항 명단(빈도·가담정도 등 고려, 경미 특이사항 배제)을 확정하고, I/O가 구두로 문체부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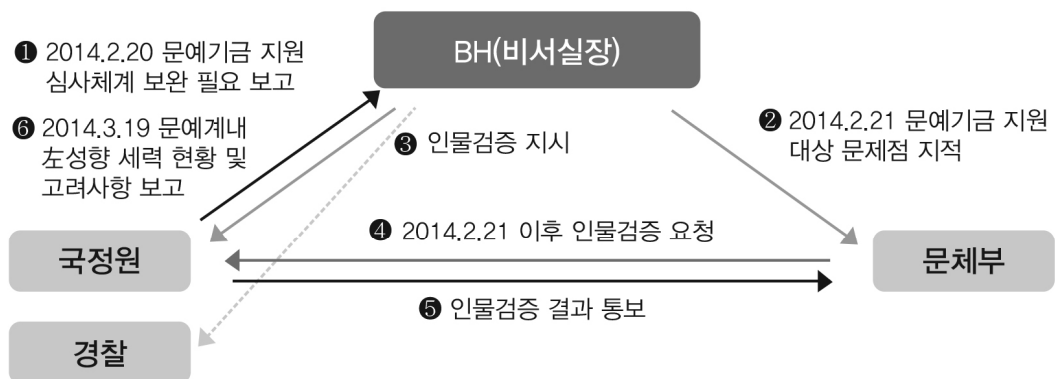
특히, 2014년 8월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문예계 左派 견제 강화 지시(출판 유공자 선정 등 현안)를 받고, 경찰(전과)·공정위(불공정행위) 협조하 자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역부족이자 국정원에 협조를 계속 요청하였음

국정원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간 문체부로부터 약 8,500여명의 인물검증 요청을 받아, 이중 민주당·舊 통진당 黨員, 정부비판·시국선언 참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통보하였음

* 2014년(1,400명 요청, 102명 통보), 2015년(3,700명 요청, 177명 통보), 2016년(3,400명 요청, 69명 통보) 등 총 348명 통보

위 인원수(8,500여명 요청, 348명 선별·통보)는 전체 실적취합을 위해 작성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문체부 I/O는 외부 유출에 대비 선별된 명단을 전화로 불러주고 별도로 문서 자료를 남기지 않아 선별·통보 대상자 실명이 모두 기재된 자료는 보존되어 있지 않음

다만, 특정 인물 선별·통보 과정에서 지휘부 보고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국정원내 잔존 보고서와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 등 종합 결과,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348명 중 181명의 實名을 확인하였음



* 국정원 개혁위원회 보도자료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2017.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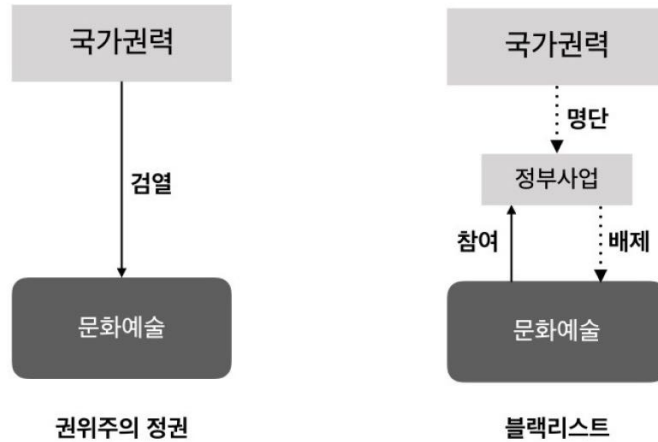
③ 국가 문화사업을 둘러싼 이권과 부패 구조로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운용

-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정책 구조(“차별과 배제”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서 파생된 두 개의 결과물로 이해해야 함
- 최순실, 차은택 등 국정농단 부패 세력
-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구속
- <한겨레21>(1179호 특집, 2017. 09. 18), “국정원 엔터팀 있었다”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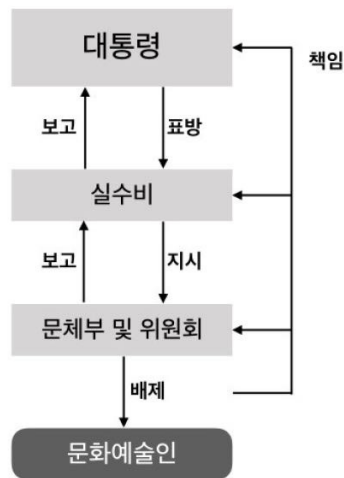
④ 지원사업(지원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술검열 정책 구조화

- 국정원은 2014년 1월 27일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 제하 문예기금 지원기준 변경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2월 20일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 제하 보고서를 통해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청와대에 종합 보고
- 문화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2014.02.24)
 - 김기춘 실장은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예산과 기금이 좌파세력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
 - 문화부는 2월 22일 국정원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념 편향성 인물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검증을 요청
- 국정원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 BH 보고서>(2014. 03. 19)
 -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시국선언·野圈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진흥기금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의 기준점을 제시
- 지원사업 정책 전반의 공공성 및 투명성 훼손
- 지원기관 전반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무력화

-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을 매개로 현장 문화예술계에 대한 사찰, 동향파악, 블랙리스트 체계 운용 등 진행



(그림 1) 블랙리스트 사태의 메커니즘



(그림 2) 블랙리스트 작성의 책임구조

* 유승익, '국가범죄로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위헌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7. 09. 27.

⑤ 국가 행정 전반을 통해 자행된 국가폭력 및 국가범죄로서의 블랙리스트 정책
집행

- 법원, <김기춘 외 1심 판결문>(2017. 07. 17) : 범죄사례 총 374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심의위원 배제) : 19
 - 문진기금 지원배제 : 325
 - 영화분야 지원배제 : 8
 - 세종도서 선정배제 : 22
- 감사원, <감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2017. 06) : 범죄사례 총 444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심의위원 배제) : 6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업지원 배제) : 298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19
 - 예술인복지재단 외 : 34
 - 영화진흥위원회 : 5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2
- 입헌적 민주주의의 침해
-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 법치국가 원리의 침해
- 평등원칙의 침해
- 문화국가 및 사회국가의 원리 침해
- 문화정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훼손
- 행정절차 및 행정법 관련 불법·부당 행위

2.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태의 의미

① 문화정책의 이념화 :

사회적 통제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념(냉전) 구도의 재생산 문제

② 예술검열의 정책화 :

개별 사건을 넘어 정책, 제도로서의 예술검열(블랙리스트) 체계 구축

③ 문화사업의 사유화 :

“선택과 집중”(화이트리스트)과 “차별과 배제”(블랙리스트)의 사업구조화

④ 지원정책의 통치화 :

권력 주체의 통치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 구조 장악

⑤ 문화국가의 무력화 :

국가 문화정책의 공공성, 다양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과 헌정 유린

3.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제도개선의 근거와 필요성

① 국가 문화행정의 피해 복구 및 정상화 과정

② 문화국가 원리의 가치 복원 및 심화를 위한 제도 수립

③ 문화권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치 구현

④ 예술검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⑤ 문화정책 안팎의 자율성 확립·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 ⑥ 문화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혁
- ⑦ 사회변동을 고려한 새문화정책 수립의 준거점 마련

4.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제도개선의 주요 방향

- ①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원인분석, 재발방지 방안 수립, 사회적 공유와 공감 등에 기반하여 출발점·전환점 마련
- ②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피해자 중심주의, 당사자 중심주의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배려에 기반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의미화하고 담론화 하는 과정으로서의 제도개선 프로세스 접근
- ③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동원 체제 구조”의 해체와 전환
- ④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던 국가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제도개선 방안 수립
- ⑤ “자율, 분권, 협치”의 원리에 기반한 문화정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문화행정” 토대 마련
- ⑥ 향후 새문화정책 수립과 상호보완적이며 협력하는 과정으로서의 제도개선 추진
- ⑦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으로서의 제도개선 추진

5. 새로운 예술지원을 위한 혁신 방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른 기관과 변별되는 이유는, 그것의 구조가 ‘행정’과 ‘예술’의 만남을 본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예술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예술적 우수성(수월성)을 강조해왔다가고는 하지만, 그것은 마침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예술’ 중심 조향이었을 뿐 그 외의 모든 과정은 ‘행정’적이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예술은 행정 안에 포함될 수 없다. 행정 절차에 맞추어진 예술 정책이, ‘지원’과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예술 행정’은 ‘예술’에 관한 행정이어야 하며, ‘예술’에 의한 행정이어야 한다. 달리 말해, ‘예술 행정’은 ‘행정 일반’의 예외이며 특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은 그 타당성에 기대지 말고 지향성에 충실해야 한다.” _ 신용목

① 본질적 목표의 전환 :

“공익을 위한 예술 진흥”에서 “예술의 내재작사회적 가치 지원”으로

② 예술의 개념과 가치 확장 :

“문화예술계의 이권”에서 “삶사회에서 예술적 가치가 창조되는 모든 과정”으로

③ 주체성의 형성 :

“국가기관과 공공정책 중심의 공급”에서 “현장(지역) 예술생태계의 형성 지원”으로

③ 협력체계의 혁신 :

“하청계열화된(청와대-기재부-문체부-공공기관-지역단체) 전달체계”에서 “시민·생활·지역 주체에게 우선적인 권한이 있는 협력체계”로 구조 개혁

④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새로운 의제 개발 및 사업화 중심”에서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공유를 중심”으로 사업 프로세스 재구조화

⑤ 시간 정책의 제도화 :

“확정적인, 성과와 결과만 있는 사업체계”에서 “불확실한, 경과와 과정이 존중되는 사업체계”로 예술지원 행정체계 개혁

⑥ 평가와 성찰이 있는 정책 :

“형식화되고 비현실적인 평가사업 남발”에서 “성찰과 혁신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평가체계”로

6. 새로운 예술지원을 위한 혁신 과제

① 예술정책 외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상징적인 측면에서부터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필요
-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헌법, 형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외
- 문화부의 역할과 조직 혁신
 - 문화부는 국가 단위 문화 권리와 가치의 확장을 위한 업무에 집중 : 국가 문화정책의 수립 및 운용, 부처간 협력,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연구(R&D)와 미래 대응 등
 - 문화부의 직접 사업 및 지원정책 관리 최소화
 - 문화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등 해체하여 외부 전문 공공기관, 지원기관과의 중복 업무 혹은 불필요한 관리업무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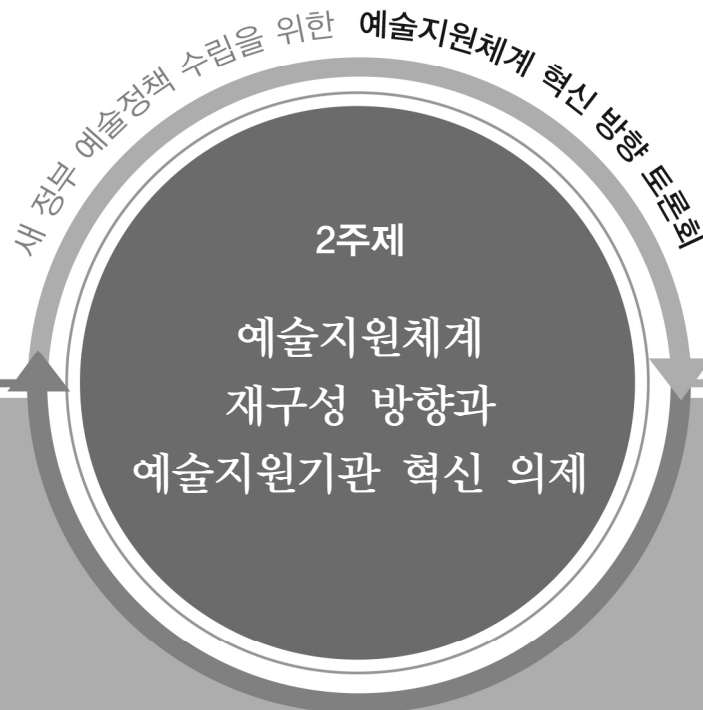
② 현장 예술생태계와의 협치를 통한 주체성과 현장성 확보

- 예술행정을 둘러싼 관료주의에 대해 본질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필요
- 국가, 공공기관 중심(폐쇄성, 관료주의, 성과주의)의 시대착오적인 예술행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장 예술생태계 중심(개방성, 숙의민주주의, 경과형)의 협치 환경 조성 : 숙

의민주주의와 공론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칭)국가예술위원회로의 이행, 주요 예술공공기관들의 운영 민주화(문화재생) 등을 통해 예술 현장과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한 예술지원기관 개혁, 통합 등 추진
-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계획수립, 집행 과정 등에서 새로운 예술행정의 가치와 제도혁신 구현

1부 / 발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예술지원체계 혁신방향 토론회 2주제 발표자료]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과 예술지원기관 혁신 의제

2017.12.07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 발표주제

- 현 예술지원체계 구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해서 늘어난 문화예술지원기관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변화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새로운 예술지원체계 구성을 위한 예술지원기관의 변화와 혁신 의제는 무엇인가?
 - 특히, 예술지원의 중심기관으로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
-

[Part1. 예술지원체계 : 변화를 위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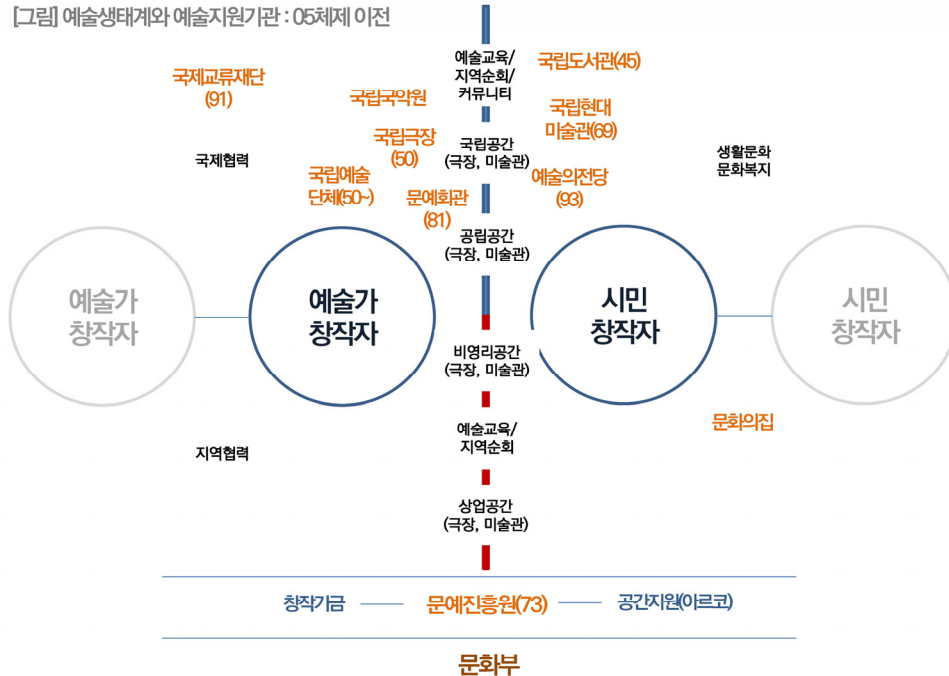
“지금, 여기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변화를 위한 질문]

질문1. 우리 예술지원 정책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나?

- 45체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립문화예술기관들의 설립
(국립도서관(45)/국립극장/국립극단(50), 국립현대미술관(69) 등 기관 중심
- 73체제 : 최초로 종합적 예술지원정책 마련, 검열과 통제의 시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72), 문예진흥원 설립(73))
- 05체제 : 창 의 한국-새 예술정책 마련, 문예진흥원의 예술위원회(합의제 자율기구) 전환

[그림] 예술생태계와 예술지원기관 : 05체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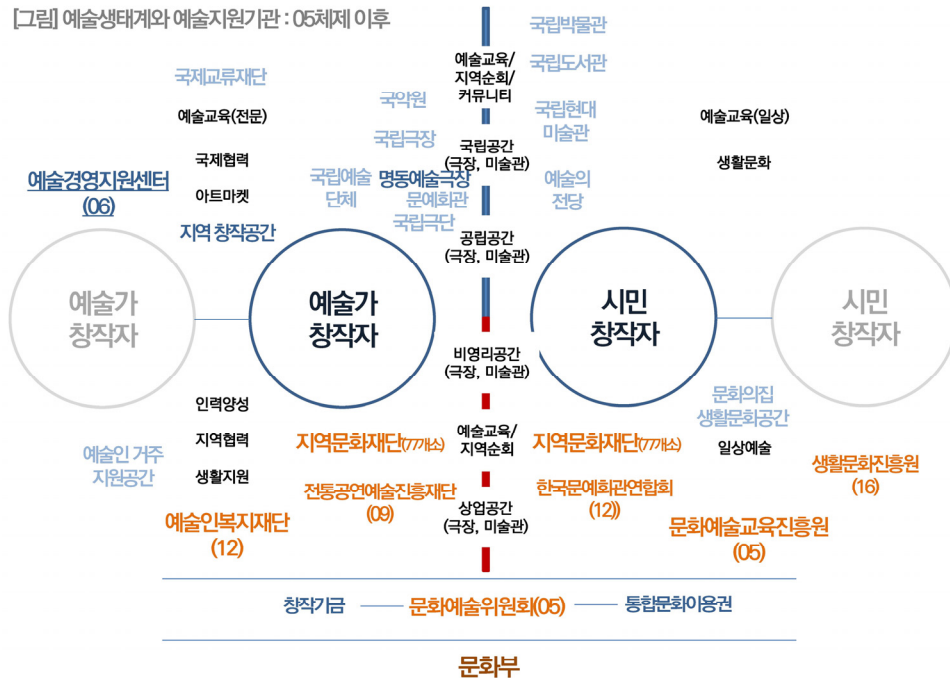


[변화를 위한 질문]

질문2. 예술지원 정책에 개입하는 공공기관들은 (2005년 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어떻게 확대되었나?

- 예술위원회 전환 (05)이후 - 예술지원 신규 공공기관 대거 등장
 - 문화예술교육진흥원(05): 문화예술교육진흥법
 - 예술경영지원센터(06): 아트마켓/해외진출, 인력양성 등
 - 전통공연진흥재단(09): 전통공연 지원 사업 등
 - 예술인복지재단(12): 예술인 복지 지원, 파견지원사업 등
 - 한국문예화관연합회(12/산하기관 전환): 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부 사업 대행
 - 기초/광역 문화재단 설립중: 서울문화재단 등
- 문화자치의 시작, 기초/광역자치단체 등 지역 문화재단 설립 (현재 77개소)

[그림] 예술생태계와 예술지원기관: 05체제 이후



[변화를 위한 질문]

질문3. (2005년 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예술지원 공공기관 확대시
미션, 활동, 방식에 대해 사회적 동의를 이루었나?

“반대가 어려운 선한 정책”
그러나, 반작용으로
“국가, 행정의 힘을 더 강화한 문화정책”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론화 되지 못함 –
정책사업 대행기관화
중첩된, 중복된 활동, 잦은 사업 이관 – 기관의 목적 사업이 되지 못하는
단위사업들

[변화를 위한 질문]

**질문4. 예술지원기구의 존립에 의문을 던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질문?**

예술정책, 예술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나?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 예술지원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

[변화를 위한 질문]

**질문5. 문화계 블랙리스트 - 예외적 사안인가?
예술 정책, 예술행정을 지배하는 힘은
무엇인가?**

**“예술가, 창작자들 위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

-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정치권력
- 비대해진 예술행정
- 4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 ‘검열’ - [사회적 재난] 상황
- 그 과정에서 문화부/문화예술지원기관이 보인 무책임한 모습들

[변화를 위한 질문]

질문6. 예술정책, 예술행정은
예술생태계의 어느 곳에 있었나?

“국민-향유 만능 예술정책”
“예술가-시민 사이의 중개자를 자처한
예술행정”

(관련한 현상들)

- 예술위원회 : 창작기금 고갈 vs 문화통합이용권(복권기금 사업) 확대
- 균형 잃은 예술정책 : 문화예술교육 등 향유자 중심 사업 예산 급증 등
- 단위사업 확대-기관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 사업개입과 관리권(국립단체가 특유영역 설정) 파견 등
- 문화가 없는, ‘문화가 있는 날’

[변화를 위한 질문]

질문6. 예술정책, 예술행정은
예술생태계의 어느 곳에 있었나?

“예술생태계 내에서
자가 증식하고 있는
예술행정”

[변화를 위한 질문]

질문7. 우리는 이대로 예술지원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성장, 경제인구감소, 세수 감소,
예술(시장)의 변동,
예술가와 삶의 변화, 취약한 자립구조 etc.”

[Part2. 예술지원체계 혁신의제 : 답해야 할 것들]

“전환을 위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

[혁신의제1 : 답해야 할 것들]

“새 예술지원체계는 무엇을 답아야 하는가”

자유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기본 가치



[혁신의제2 : 답해야 할 것들]

“새 예술지원체계는 무엇을 답아야 하는가”

예술지원체계, 전환의 지점들

- 근대 국가의 위기: 보호 vs 폭력 (언제든 돌변하는 역사)
- 뒤틀린 구조: [검열] [통제] [비전문적 관여] [무책임]
- 예술지원체계, 예술지원기관의 체제 전환 필요
- 예술지원체계 체제 전환의 지점들:
시민(현장) [거버넌스] / [자치분권(지역화)] / [시스템 기반 자율구조(오픈플랫폼)] 등

[혁신의제3 : 답해야 할 것들]

“새 예술지원체계는 무엇을 답아야 하는가”

공감과 신뢰의 프로세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과 성찰 : 국가/정부(특히 문화부)의 위기
- 정부 주도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 : 현장/시민 주도 정책으로의 획기적 전환
- [예술가-시민-행정] 거버넌스(협치)의 다양한 모델 구상, 실험, 도입 필요
- [새로운 예술지원 거버넌스]를 통해 공문화/공감, 자혜를 모아야 함

[혁신의제4 : 답해야 할 것들]

“새 예술지원체계는 무엇을 답아야 하는가”

예술가 시민 & 자치분권의 시대

-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 예술위원의 대표성, 예술기관 대표자의 대표성, 예술행정의 대표성 등
- 당사자-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도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예술행정-예술기관-예술위원(학대)-현장예술가-시민]
- 자치분권의 시대, 지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인가?

[그림] 예술가와 지역의 위상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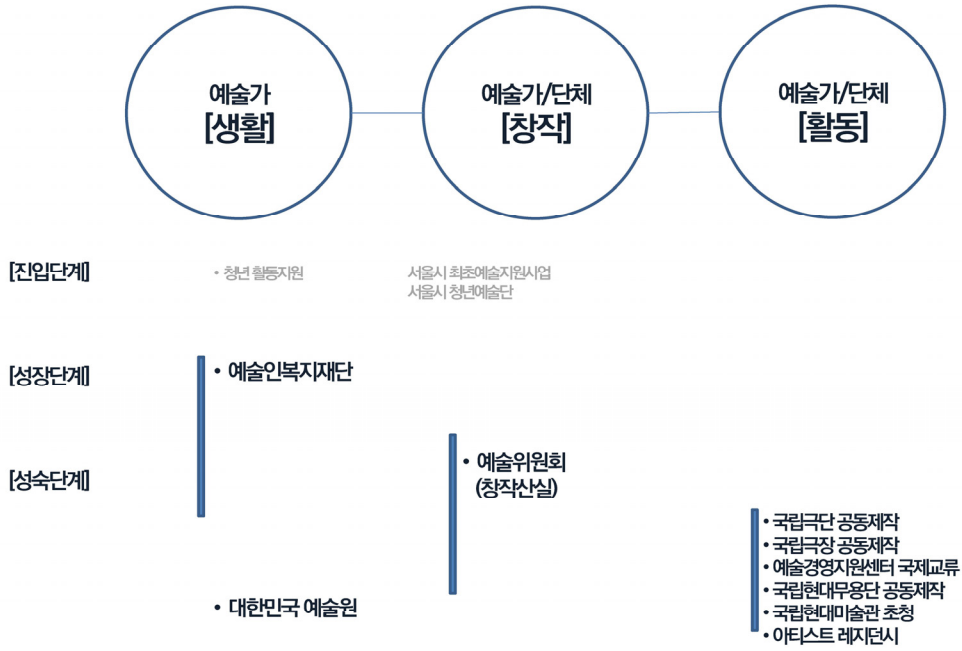
[혁신의제5 : 답해야 할 것들]

“새 예술지원체계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예술가의 삶, 지위와 권리,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론화

-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직업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공론화
- 예술가의 성장 단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 예술가의 삶 [생활]-[창작]-[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그림] 예술가의 성장과 활동 매핑



[혁신의제6 : 답해야 할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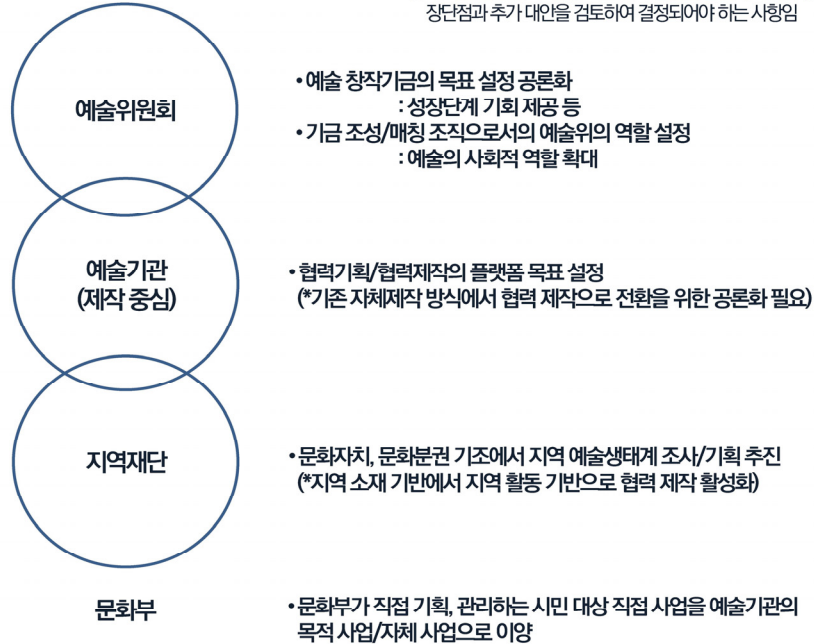
“새 예술지원체계는 무엇을 답아야 하는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오픈 플랫폼

- 결국 예술지원체계는 [정책화 과정-정책집행 과정-정책환류 과정]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핵심 : 일하는 방식(Way of Working) 혁신이 전제되어야 함
- 예술지원체계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오픈 플랫폼의 시대
- 기획된 자원 트랙이 현장 예술활동의 제약을 줄 수 있는 구조 개혁 필요. 자원 트랙의 단 순화(*트랙 재매핑을 통한 선진화된 구조 마련)
- 예술생태계의 주체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변화
- 예술 프로젝트, 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구조 만들기가 핵심

[그림] 예술지원 조직의 역할 재구성 의제 “제 위치에서 잘하자”

(주) 제시된안은 정책-현장-예술위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단점과 추가 대안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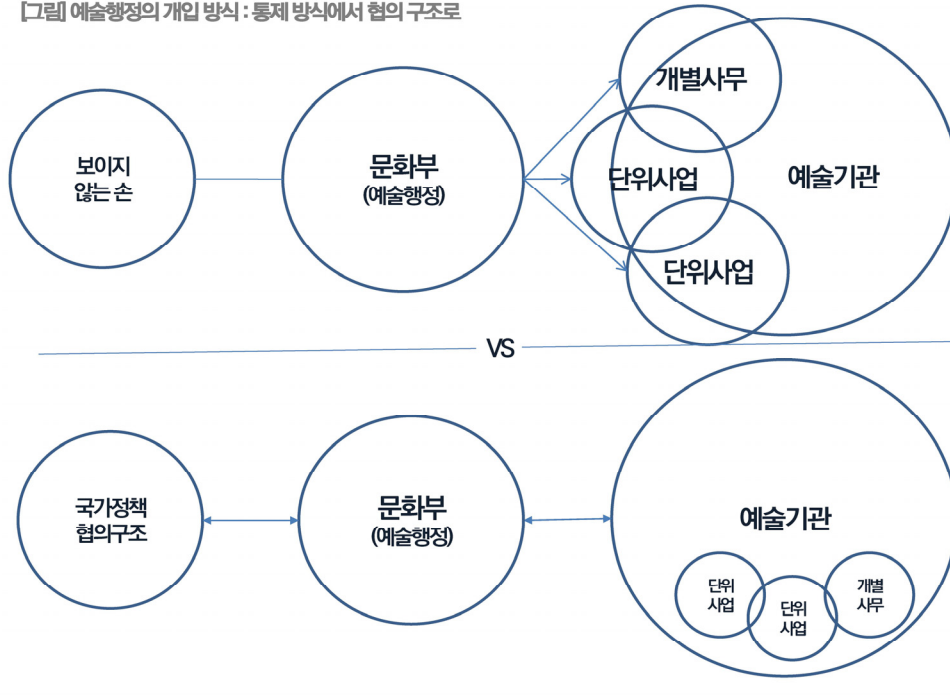
[혁신의제7 : 답해야 할 것들]

“18체제 예술지원체계는 무엇을 답아야 하는가”

예술기관의 권한과 책임

- 공공 예술지원(정책실행)기관들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평가 : 기관장과 이사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함 (이를 감시, 견제하는 기구 마련 검토 '예술가-시민위원회' 같은 방식,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예술지원(정책실행) 기관장(대표자)/이사진 선임 절차의 마련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공모(자천/타천)-선정 등 일련의 프로세스 정립으로 최적의(핵심역량, 공익적 마인드/청렴/전문성) 기관장 선임을 위한 절차 마련
- 주요 국립예술기관 '기획운영단장' 직제 폐지 및 공무원 파견 제한
- 문화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감독을 거부할 권리 (*긴급 이사회 개최)

[그림] 예술행정의 개입 방식: 통제 방식에서 협의 구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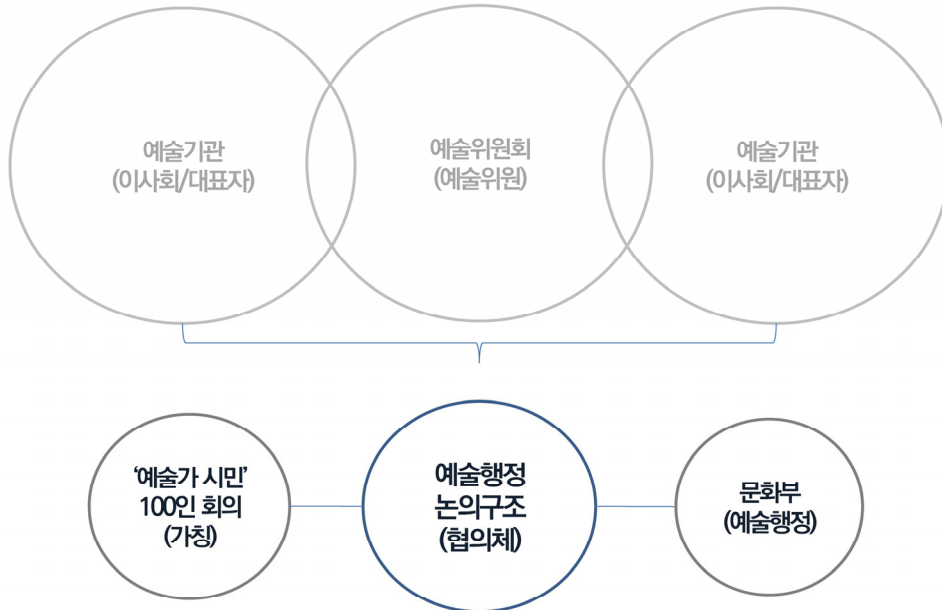
[혁신의제8: 답해야 할 것들]

“18체제 예술지원체계는 무엇을 답아야 하는가”

예술행정 논의구조와 문화부의 역할

- 예술기관간 정책 협의 구조 마련 :
 - 현행 문화부(예술국) 중심에서 [예술위-기관 대표자-문화부 협의체] 마련 (정책 논의)
 - (예시) 예술정책(공연예술) 협의체 : (예술위-국립극장-국립극단-국립현대무용단-예술인 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 etc.)
- 문화부(예술행정)의 역할 :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 부처 간 협상 역량 높이기(기재부, 교육부 등),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측 옹호자, 예술의 사회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높이기, 예술가의 지위와 인권에 대한 옹호자 등
- 문화부 주무부서가 예술지원기관의 개별 사업 또는 개별 위임사무를 직접 관리감독/통제 하는 후진적 구조 개혁 (*문화부는 예술지원(정책실행)기관의 연(또는 임기) 단위 고도화된 다면평가 체계 도입 운용)

[그림] 예술행정의 논의구조



[Part3. 예술위원회 혁신의제와 방향]

**“예술위원회,
예술현장과 시민이 준
마지막 기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회 백서 - 프롤로그에서 발췌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날은 2005년 9월 29일, 일기예보가 “서울 맑음”을 전하는 상서로운 어느 초가을 오후였다. 그리고 석양이 지는 늦은 일곱 시, 출범식을 겸한 축하공연 ‘희망의 우체통’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온 몸에 받으며 우리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대에 올랐다. 리허설도 없이 처녀작을 개봉하는 것만큼이나 모험적인 행보였다. 마치 한 영혼이 사춘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춘기를 맞고, 어른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어른이 되며, 늙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서 늙는 것처럼, 제1기 위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었던 그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그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우리는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는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진실로, 우리는 그간 ‘공익활동에 나선 자’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는 다짐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때 우리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었으며, 어떤 한계에 갇혀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 그러면서 내닫기만 하려고 뛰고 달렸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우니 모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전제해두어야 했던 것들이 그날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은 시인이 제목도 없이 쓴 시 한 편을 떠올리게 한다.

[예술위원회 혁신의제와 방향1]

“예술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 관료적 행정에서 벗어나
- 예술가, 창작자의 편에 존재해야 하며
- 예술의 사회적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예술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법률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 예술위원회의 설치 근거〉

제5장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술위원회 혁신의제와 방향2]

“예술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다양성(예술활동의 방식, 세대, 젠더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 확대
: 현행 9인 내외 장르 중심에서 15(~20)인 내외 확대
- 주요 예술지원기관 대표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확장된 의견 수렴 방식 도입 필요: “예술위원회 - 100인 패널”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 위원회의 구성〉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1.5.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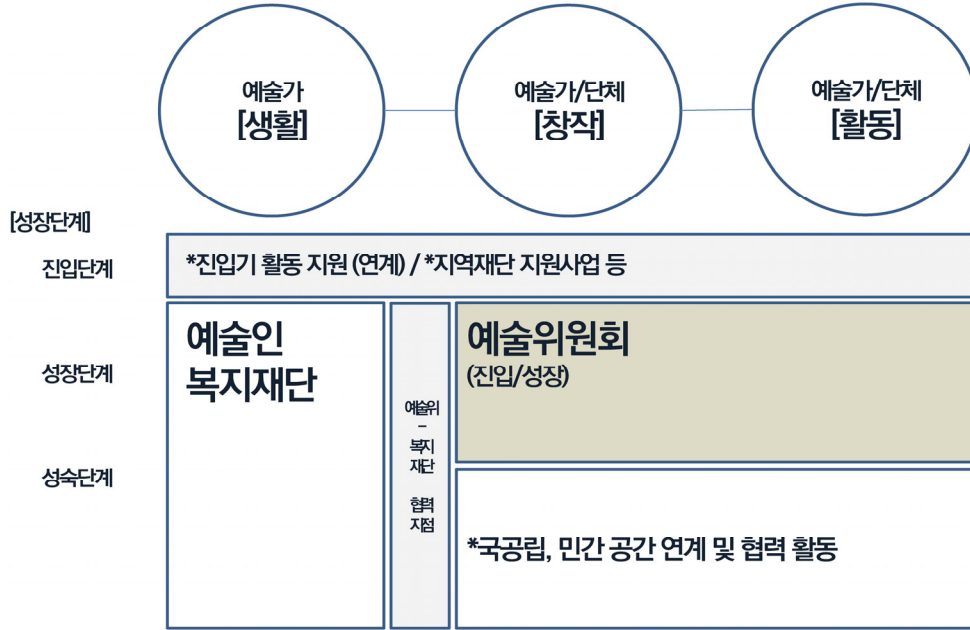
[예술위원회 혁신의제와 방향3]

“현재의 예술생태계에 맞게 예술위원회 사업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 기금지원 목표 및 사업의 재구성에 대한 문제
- 새 예술기금 및 자원 발굴과 기부금 매개에 대한 예술위의 역할 설정
- 복권기금을 예술위원회 사업 목적성에 부합하게 일부 전환하는 문제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복권기금)의 예술위 목적 사업 적합성에 대한 검토
- 아크코예술극장, 미술관, 자료관 등 공간 및 활동 사업의 목표 재구성에 대한 문제

[그림] 예술위원회 지원 핵심 영역 설정 (예시)

(주) 제시된 안은 정책-현장-예술위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단점과 추가 대안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표] 예술위원회 2017년도 지원사업 현황 (출처: 예술위 홈페이지)

분야	사업명	비고
문학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시각예술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공연예술공동	공연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2017-2018년 상반기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대관 공모	
연극/무용 전통예술/창작뮤지컬	공연예술창작산실 - 「올해의 신작」	
	공연예술창작산실 - 「올해의 레퍼토리」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아이디어 지원사업 (가칭)	
전통예술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공모	
음악	오작교프로젝트	
	관현악 지속연주지원	
	2016-2017 오페라 창작산실	
	2017-2018 오페라 창작산실	
창작뮤지컬	창작뮤지컬 해외공동제작지원	

[표] 예술위원회 2017년도 지원사업 현황 (출처: 예술위 홈페이지)

분야	사업명	비고
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스태프)지원	
국제예술교류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자율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기획형)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 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ARKO-PAMS 협력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자율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기획형)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 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ARKO-PAMS 협력지원	
소외계층문화순회	(복권)소외계층문화순회 -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복권)소외계층문화순회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예술위원회 2017년도 지원사업 중 창작산실 소개 (출처: 메인 홈페이지)]

“공연예술 창작산실은 제작부터 유통까지 연극, 무용, 뮤지컬 등 ... 우수 창작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입니다. 기획안 PT부터 쇼케이스까지 단계별 심의를 거쳐 선정된 총 22개 작품을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창작산실 소개

공연예술 창작산실을 소개합니다.



공연예술 창작산실은 제작부터 유통까지 연극, 무용, 뮤지컬, 전통예술, 오페라 등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입니다. 기획안 프레젠테이션부터 쇼케이스까지 단계별 심의를 거쳐 선정된 5개 장르, 총 22개 작품을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Arko Selection의 심벌마크는 ART의 A와 별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뛰어난 예술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통해 엄선된 작품임을 의미하는 Arko Selection의 심벌마크는 곧 관객의 작품 선택을 위한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기 갈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은 작품성을 기반으로 더 큰 무대로 진출,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위원회 혁신의제와 방향4]

“현장에서 신뢰받고 있지 못한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예술위 사업의 재구성 (*사업재구조화 공론화 과정 추진)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의 전면적 개선 : 기금이용자(예술가) 중심 서비스 디자인
- 심의 방식의 혁신 문제 : 심사위원 풀 및 선임 방식, 집중 심사제 도입 등
- 사무처 내 조직 시스템
- 공론화 방식을 통한 혁신 로드맵 제시 (*위원회 내외부 혁신기구 마련)
- 공개성의 원칙 실현 및 위원회 권력화 방식 : 예술위원회 주요 의제 회의 생중계 / 예술위원 및 사무처 직원 윤리 준수 사항 마련 등

[예술위원회 혁신의제와 방향5]

“혁신을 전제한다면, 예술위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방향설정) (주) 제시된 안은 정책-현장-예술위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 예술지원 정책을 총괄하여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기구
- 예술지원 관련 기금/재원을 총괄 관리, 분배하는 기구
- 예술의 가치, 변화, 변동을 사회에 알리고 국민과 공유하는 기구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취지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과의 충돌 해소 필요 (별도 법령 마련 검토)

[예술위원회 혁신의제와 방향]

“새 예술지원체계에서 문화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 제시된 안은 정책-현장-예술위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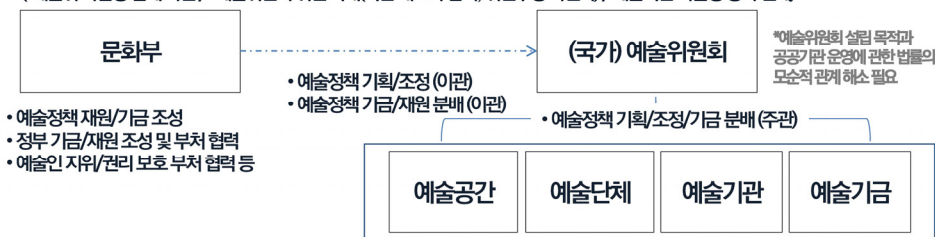
- 지원 사업과 내용,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 지원 사업과 내용에 대한 개별적 평가가 아니라, 예술위원회 등 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문화부-기관 협약(중기/연간협약)을 통해 기관의 성격에 맞는 객관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예술위/지원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이 되지 말아야 한다.
- 예술,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 기금, 자원 확보를 위해 기재부 등 부처 간 설득,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예술위원회 (당연직 위원 또는 참관인)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예술위원회와 사무처 임직원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인사위원회 소집 요청 등 개입할 수 있다. (*이하 문화부 역할에 대해 문화부-기관 협약에 반영함)

[도식] 예술정책 기획/집행 체계의 재구성 (대안)

(주) 제시된 안은 정책-현장-예술위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단점과 추가 대안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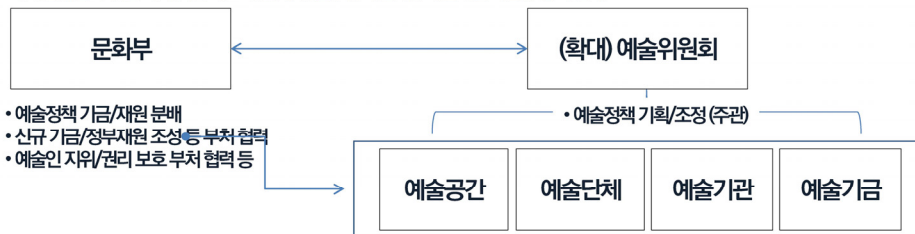
1안. 전면 개편 / 예술정책 기획조정 및 자원 분배 예술위원회 이관

(*예술위 독립성 법제 마련 / *예술위원회 위원 확대(7인 대표자 참여, 위원구성 다원화) / 예술기관 자율성 강화 전제)



2안. 현행 보완 / 예술정책 기획조정 기능 예술위원회 이관

(*예술위원회 위원 확대(7인 대표자 참여, 위원구성 다원화) / 예술기관 자율성 강화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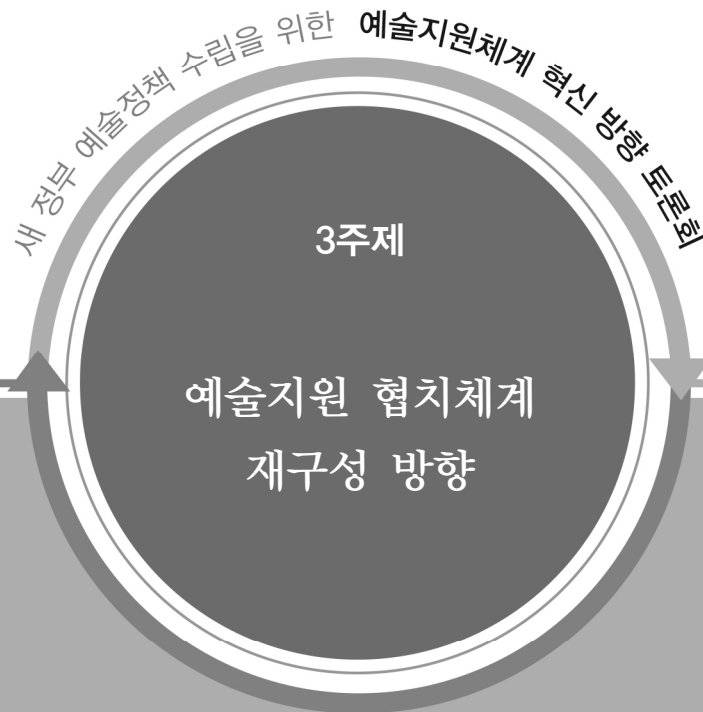


[예술위원회 혁신의제와 방향7 :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야 할 질문]

**“예술정책, 예술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부 / 발표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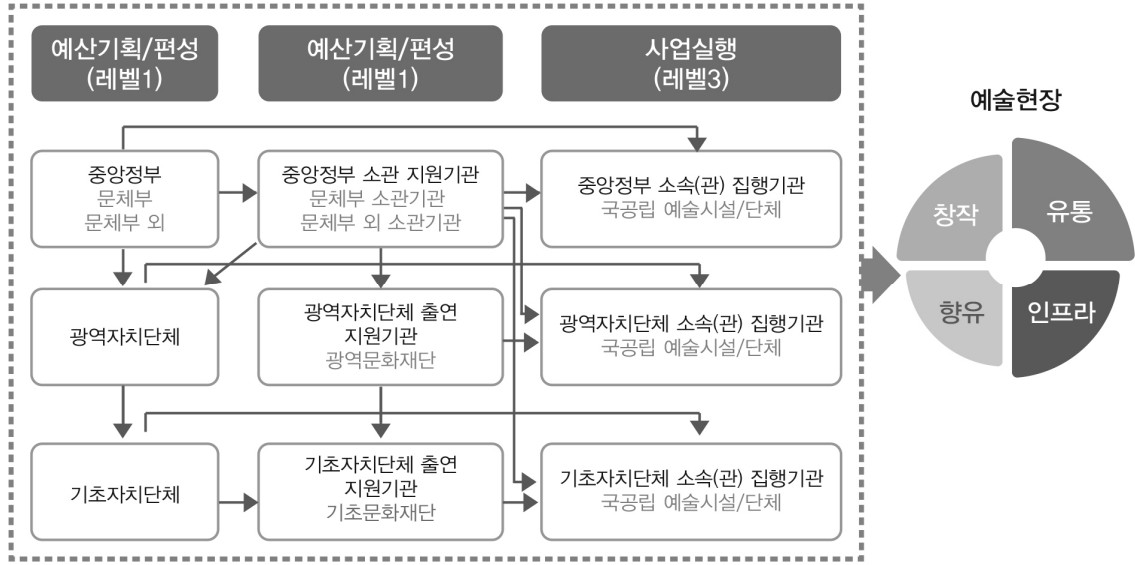


1. 예술지원체계 현황

- 우리나라 예술정책은 국민의 정부 이후 내용적 세분화 및 양적 확대의 발전경로를 거쳐 200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 팽창 전환기를 맞이하게 됨.
예술정책의 확장적 변화 추세는 예술지원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 중앙정부의 경우,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중심축으로 단선적이고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예술위원회 출범을 전후로 장르 및 분야별 예술지원 기관이 불규칙하게 증설되며 점차 다중적 예술지원체계의 형식을 갖추게 됨.
2017년 현재 6개 소속기관 및 23개 공공기관이 문화부 예술지원체계에 관여.
 - 더불어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맞물려 1997년 경기문화재단과 2001년 부천문화재단이 각각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지자체별로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본격화되어 2017년 현재 77개소의 광역·기초문화재단이 지역단위 예술지원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출발 지점만을 놓고 본다면 중앙의 다변화된 예술지원체계는 확장된 예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시설 및 지역축제 운영을 목적으로 구성된 체계라는 점에서 연계적 체계라기보다 분절적 체계로 보아야 할 것임
- 중앙과 지역의 예술지원체계가 교차되며 상호적 관계망으로 변화하게 된 주요 시점은,
 -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며, 중앙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거점으로 광역문화재단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국비·지방비 매칭형 사업으로 구조화시킨 것과
 - 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일부를 ‘지역협력형사업’으로 분리, 광역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며 국비·지방비 매칭형 사업으로 변화시킨 이후로 볼 수 있음
 - 중앙과 지역의 교차된 예술지원체계에 포함되는 사업과 지원기관의 숫자가 늘어나며, 지원체계의 전체적 구조는 복잡계 양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함

1) 창작지원 분야 :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체계

○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체계 1)



〈그림 : 공공부문 문화예술 지원 전달 흐름〉

-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자체 → 광역문화재단 → 민간의 경로로 운영
 - 예술위원회는 전년도 사업평가를 기초로 시도별 문예진흥기금 배분액 결정, 사업운영 세부지침 및 지방비 매칭비율 등을 공시하여 지자체 교부
 - 광역 지자체는 국비인 문예진흥기금에 지방비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예산 총액을 위탁사업 형태로 광역문화재단에 전달
 - 광역문화재단 사업운영, 일부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기초문화재단으로 재교부
-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 운영을 위한 협의체계
 - 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통해 사업운영, 예산배분 등의 협의를 하고 있으나, 자문 및 제안 기능 중심으로 의사결정 권한은 부

1)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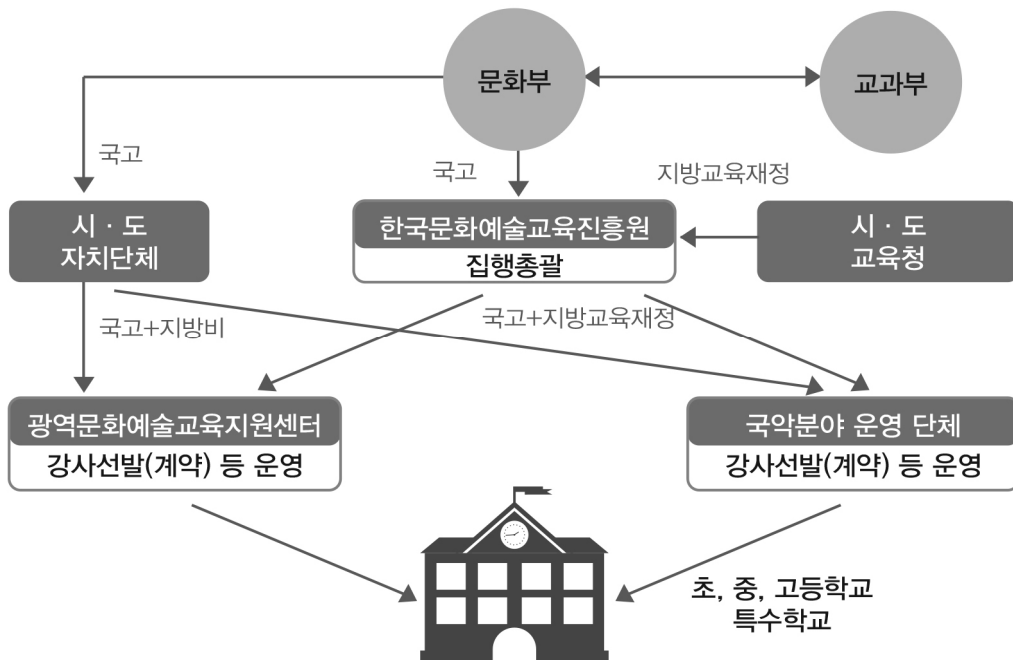
여되지 않음

- 이와 별도로 권역별 지역협력관 제도를 활용하여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을 포함 예술위원회 및 광역문화재단간 정책 협의 및 조정 역할을 담당

- 현행 체계는 정책 협의기능 보다는 사업 실행간 전달체계, 국비·지방비 매칭을 위한 예산분담 체계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상위 전달체계인 문화부 및 예술위원회에 예산 배분 및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중간 및 하위 전달체제로 갈수록 사업·예산 의존성이 심화되어 자율적 지원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있음

2) 문화예술교육 분야 : 학교예술강사 지원체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운영중임



〈그림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체계〉 2)

2) 김세훈 외,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 ①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민간
 - ②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민간
 - ③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자체→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민간등의 복수 경로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사업추진체계 상 중앙정부가 지정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핵심적 전달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는데,
 -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협의 채널이 부재하며, 권역별로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간 협의체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편
 - 중앙정부가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주체를 Top down 방식의 획일화된 기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생활권역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주요 운영주체인 기초 문화재단 등은 지원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주체에 해당되는 영역별 문화예술교육강사들의 정책협의 및 참여구조 역시 부재한 상황

2. 현행 예술지원체계의 문제점

1) 통합적 정책협의 채널 부재, 중앙정부 중심의 위계적 전달체계

- 공급자 관점, 중앙정부 주도 획일화된 사업·예산 운영 지침
 - 현행 예술지원체계는 상위기관의 규정성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체계로서, 정책적 협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며 중앙과 지역간 재정분담 및 행정서비스 전달 통로로 구조화되어, 지역 문화재단 등 중간지원기관의 사업운영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예술현장, 시민 등의 수요자 정책반영이 불가능한 체계
- 지역 및 현장의 정책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Top down 방식 운영체계
 -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역협력형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별 자원배분 기준의 정책적 일관성이 미흡함. 지역 및 사업영역별 정책수요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적 자원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단년도, 단위사업별 재정운영 원칙을 중기적 관점에서 지역별 재정협약에 따른 포괄적 문화재정 교부방식으로 구조적 전환 필요

2) 지원체계의 복잡성과 지원주체간 불명확한 역할 분담

- 예술지원체계의 복잡성은 추진주체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 전달체계의 복잡성 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임
 - 문제는 최종 지원대상이 민간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사업 추진체계의 복잡성이 가중될수록 정책지원수혜 대상의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과,
 - 체계상 경로구분이 복잡하고 불명확해질수록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용 등의 낭비 요소가 증대되고, 사업추진 효율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결과적으로 정책과 행정의 전달체계가 복잡계로 수렴될수록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피해는 복잡화된 예술지원체계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된 현장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 지원주체간 정책목표에 따른 역할분담이 아닌 단위사업별 역할분담
 - 대규모 사업예산을 ‘중앙정부-광역문화재단’의 획일적 지원체계로 운영하는 기존 방식을 생활권역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광역-기초’로 확장되고 정교한 추진체계로 정비
 - 특히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향유 사업의 경우, 기초문화재단의 역할과 지원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등 중앙정부 지원체계는 정책형성 및 평가, 지역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사업추진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지역문화재단 등 중간지원기관의 소극적 책임성

- 예술지원체계상 중앙정부·지자체-민간·예술현장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문화재단 등 중간지원기관의 수동적 역할에 대한 성찰 필요

- 중간자로서 지역문화재단은 정부 및 지자체 문화행정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민간, 예술현장의 요구를 지원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 상위기관의 위계적 지원체계에 수동적으로 편입되어 공공·민간 분야의 거버넌스형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구현하지 못한 책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지원체계의 현장성과 역동성을 매개할 수 있는 능동적 지원주체 역할을 수행해야 함

4) 예술현장의 참여구조가 배제된 지원체계

- 공공부문 주도·공급자 중심 예술지원체계에서 민간영역·예술현장은 구조적으로 배제
 - 수직적 관료제의 예술지원체계상 민간 및 예술현장 주체들은 협치와 거버넌스의 공식적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지원사업의 수혜자, 문화향유자로서 호출되고 있는 상황
 - 문화민주주의 맥락에서 현장의 예술인, 시민들이 지원체계의 책임있는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지원사업 심사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전문가 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참여적 문화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풀뿌리는 외면되고 엘리트가 중심이 된 대의민주주의가 보편적인 현실이다. 이 민주주의 모델의 약점은 융합이 아니라 관계의 분리와 힘의 쏠림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중략)
 거버넌스가 확대되어왔으나, 주체간의 권한이 균점되지 않고 숙의와 토론이 결핍되었으며 정책과정 에 한정된 관 주도의 위계적 파트너십이 주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략)
 복합지배민주주의는 협치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는 시민의 덕성과 능력을 전제한다. 즉 단순한 참여나 목소리의 과잉을 넘어 공고한 사회적 연대와 공적 속의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을 갖춘 시민의 존재를 요청하는 것이다.”³⁾

3) 장우영, 복합지배민주주의를 향하여, 2017

3. 협치에 기반한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

1) 굿 거버넌스, 협치적 예술지원체계의 구성 원리

- 협치와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예술지원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참여, 소통, 조정,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공통된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서의 예술지원체계 ⁴⁾
 - 거버넌스의 개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위계적·통치적 질서와 달리 정부와 시민사회 행위자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그리고 대화·협상·조정의 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칭
 - 최근의 행정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굿 거버넌스는 시민중심, 과정중심적이며, 정부에 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도 시장주의적 성과보다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선택과 배분을 강조. 행정의 주체, 방식, 활동, 관리의 중심에 시민이 있으며 시민자치역량에 의해 굿 거버넌스는 정의됨
 - ① 정보공유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함으로써 정보공유는 참여와 협력을 실효성있게 만드는 장치로 역할
 - ② 참여성 :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여 보장. 단순한 운영(위원)으로서의 도구적 참여가 아니라 누구든지 운영 규칙에 따라 참여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의견의 자유로운 제시, 관련 정보의 상시 접근 등을 보장하는 적극적이며 실질적 참여
 - ③ 협력성 :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각 행위자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밀고 당기는

4) 이하의 내용은 김정희,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대도시의 주민참여행정 비교연구, 2015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같은 글에서 김정희는 굿 거버넌스 실행정도를 참여성, 책임성, 반응성, 제도화 등 4개 평가지표로 분석. ① 참여성: 참여의 양과 질, 성별·직업별 비례성, 특정 계층 과다 대표성의 오류 여부, 참여 주체 영향력이 균등한가(참여의 민주성과 형평성) ② 책임성; 권한과 책임의 제도적 보장 유무, 상호책임성 ③ 반응성; 정책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 및 안건의 어느 수준으로 수용되었는지 등 소통과 수용 정도 ④ 제도화; 제도화 유무 및 제도화·실행 수준

상호협 력작용. 참여 주체간 중복된 업무 없이 명확한 역할 분담 하에 조력이 이루어지고, 신뢰에 기반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2)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참여적 문화거버넌스

- 위계적 전달체계에서 수평적 정책네트워크로 전환
 - 예술지원체계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운영 주체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공유와 참여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로 재구성
 - 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마련
 - 위임된 대표성으로서 전문가주의의 과소대표성·과다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현 장과 민간의 참여 보장. 민간의 참여는 정책집행 단계의 부분적·절차적 참여가 아닌 ‘의제 선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에 이르는 전단계 참여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3) 협치에서 자치로 이행하기 위한 문화거버넌스체계

- 중앙과 지역 : 문화분권에서 문화자치로
 - 예술지원체계상 중앙과 지역의 정책목표 설정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에 대한 적극적 이관, 이양계획 수립
 - 광역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사업,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정책사업 각각에 대해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
- 공공과 민간 : 행정에서 현장으로 권한 이양
 - 문화자치는 좁게는 문화행정에서 지역 자치의 실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도시의 형성 또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문화의 형성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문화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임 ⁵⁾

5) 류정아 외, 지역문화 정책분석 및 발전방안, 2012

- 예술지원체계가 해결하고자 하는 예술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은 당사자들인 예술가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뒷받침 필요

4. 실천과제

1) 가칭 ‘문화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 예술지원체계에 포함된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적 정책협의 기구로 가칭 ‘문화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적 정책협력 네트워크로 운영
 - 문화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부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예술 현장 등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구성
 - 주된 역할은 정책집행 단계에 관여하기 보다 ‘정책계획의 수립’ 및 ‘평가환류’ 단계를 중심으로 통합적 조정,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이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2)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간 관계설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지원사업 운영 전략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 수립을 통해 기관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 상호간 사업 및 예산계획 실행을 위한 3년 단위 재정 및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사업 운영 자율성 확대
- 문예진흥기금 대체재원 확보 및 지원체계 혁신
 -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부족분을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재정 안정성 및 기관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기금간 전출·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하여 문화예술 분야 6개 기금을 통합 운영 체계로 전환시켜 각 기금별 정책 및 예산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거나
- 문예진흥기금 대체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여 3년~5년 단위로 중기재정 수요를 예측,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약 체결의 핵심조항으로 반영
- 예술지원사업 운영기조 재편

~에서	~으로
• 단년도 지원 • 창작결과물/작품 중심 지원 • 경력과 무관한 단일트랙 지원	• 다년간 지원 • 예술가/예술단체 대상 포괄적 지원 • 경력단계 및 생애주기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에 포함된 국(공)립 예술단체 사업 및 예산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로 이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민간 예술단체, 국(공)립 예술단체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총량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공)립 예술단체 재정운영 효율성 및 민간 예술단체 지원재정 충분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한 중앙·지역간 협력형 사업 추진방식 전면 개편

- 재정 분담의 반대급부로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의 구체성·종속성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따른 사업의 고유성, 차별성 확보 어려움
- 정책목표 공유에 기반한 재정분담'의무와 사업의 자율적 추진'원칙 정립

3) 분권형 예술지원체계

○ 사업별 특성 및 정책수요에 따라 사업·예산 권한을 중앙 → 광역 → 기초로 이관·이양

- 현행 예술지원체계상 사업단위로 예산이 교부되는 분립적 운영방식을 실제 사업 운영주체인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포괄적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개편하되,

- 예술창작지원의 경우 중앙 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간 정책적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광역 단위 정책사무와 예산을 이관시키고, 생활권역 중심의 정책사업은 기초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개편
- “기초자치체 단위는 생활권의 일상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촉발되고 장려되도록 미시적 제도와 조직의 장을 마련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일선이 맡아야 할 사명이다. 반면 광역과 중앙은 기초-생활권 단위에 기획 권한과 포괄적 예산 집행의 여건을 제공하면서, 기초 단위가 대처하기 어려운 예술장르 및 문화산업 지원을 받침하고 이 또한 중단기적으로는 지역화와 협치의 원리로 재조직화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⁶⁾

4) 민관 거버넌스형 정책패널제도

- 당사자주의에 입각 현장 예술인들의 정책집행, 심사, 평가 참여제도 마련
 - 전문가주의의 위임 대표성 보완, 활동분야·성별·연령 등을 고려 비례대표성에 기초한 정책패널 구성
 - 예술현장 참여구조의 제도화 및 정책집행, 지원심의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새정부 문화정책 수립 이후 정책집행 평가제도 운영, 공론화위원회 모델을 참고하여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식 등 검토

○ 참고 : 세종시 시민배심원단 ⁷⁾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고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 및 환류과정
-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 구성
- 배심원단 심의결과 및 권고 전달 ⇒ 심의결과 공포·배심원단 권고의견 수용 여부 공시
 - 대상 : 세종시 거주 만 19세 이상 시민
 - 인원 : 40명
 - 구성방법 :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6) 김종휘,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제, 2017

7) 세종특별자치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2016에서 요약

5) 문화예술 분야 참여예산제도 도입

○ 참여예산제도 8)

-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투표권자인 시민이 선출한 정치적 리더들이 선도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수준의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은 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산의 경우도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의회로 분류되거나 행정조직의 예산 편성에 의하여 전체적인 골격이 정해지고 일부 예산에 대한 증감만 의회에서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관료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과 예산배분내용의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예산제도이다

○ 장르 및 활동분야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도입 후 확대

- 생활문화 등 문화향유, 예술인복지, 지역거점 문화재생 사업 등

6) 지원사업 심사제도 개편 9)

○ 심사위원 풀 데이터베이스화(DB) 확대

- 장르별, 영역별, 분야별 심사위원 풀을 입체적으로 확대하여 DB화
-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적합한 전문 심사위원을 확보
- 심사위원 제적사유에 대한 기준을 확대 및 엄격하게 적용

○ 예술지원 심사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문체부 예술정책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한시적으로 심사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 지원체계, 심사위원 구성방식, 심사방법, 채점방법,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한 매뉴얼 작성

8) 손종필 외,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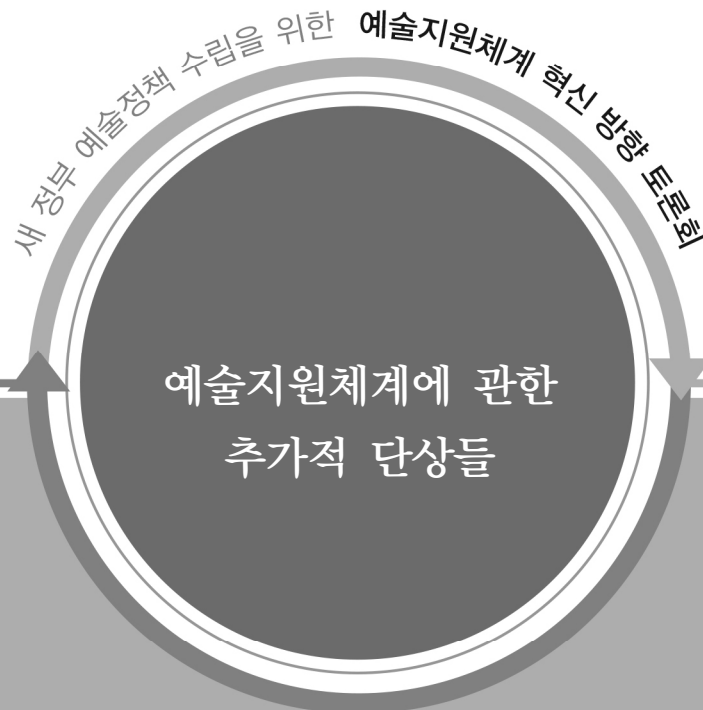
9) 이하는 이동연, 예술정책 미래전략, 2017의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임

- 다면 심사와 클린심사를 위한 기본 원칙 마련
- 지원심사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활용
 - 심사의 부절적인 결과에 대한 제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원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서 리뷰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재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중 부적절한 심사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 풀에서 제외하는 장치 마련
 - 부당하게 탈락한 심사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 심사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 평가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DB 구축 및 심의-평가 연계 시스템 강화
 - 심사의 내용들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 심사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 결과에 대한 내실 있는 리뷰 게재
 - 일괄적인 모니터링 중심의 평가제도에서 우수 사업에 대한 리뷰와 비평 기능의 평가 강화





2부 / 토론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 ‘지원’의 언어적·상식적 오인효과: 예술에 대한 ‘지지’ 없는 ‘원조’

支援 [사전적 의미] 지지하여 도움

支持 [사전적 의미]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
 하여 힘을 쏟. 또는 그 원조

도움 [사전적 의미] 남을 돕는 일

돕다 [사전적 의미] (1)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

(2) 위험한 처지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다

(3) 어떤 상태를 증진하거나 촉진하다

- 예술지원에 대한 일상적 인식: ‘지지’와 ‘도움’의 분열 → ‘지지’ 없는 ‘도움’
 - 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생산해 내지 못한 문화정책
 - 예술을 단순히 ‘도움’의 대상으로 평면화시킨 문화정책
 - 문화예술행정의 확대, 문화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술지원이 예술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정책으로 전락
-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유네스코, 1980)
 - “예술이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 보존, 풍요롭게 하고 표현과 의사전달의 보편적 형식을 구성하며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공통분모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사회에의 소속감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다는 점을 인정하여, 회원국은 당연히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인류가 전반적으로 예술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회원국은 개인의 생활과 발전 및 사회에 미치는 예술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인정, 그에 따라 예술가와 그의 창작의 자유를 보호, 방위, 조력해 줄 의무를 갖는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예술 활동과 재능의 만개를 자극해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의 보다 많은 자유 – 이 자유가 없이는 예술가는 말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없는 – 를 확보해 주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줄 제반 조치들을 채택해야 하고 또한 예술가들에게는 그들 활동의 결실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모두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예술가들에게 생활의 질에 관계되는 결정에 참여할 기회의 확대를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국은 임의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보다 정의롭고 보다 인도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평화와 정신적인 풍요가 있는 환경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범세계적인 노력을 하는데 예술활동이 한 몫을 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적절한 입법수단을 통하여 예술가들에게 노동조합과 직업단체를 선택, 결성하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그러한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또한 예술가를 대표하는 조직체들이 예술가의 직업훈련을 포함한 문화정책과 고용정책의 형성 및 예술가의 작업 여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1. 회원국은 학교에서 그리고 일찍부터 예술적 창조와 예술가적 사명의 발견과 계발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시켜 주기 쉬운 모든 수단들을 증진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일이 효과를 보려면 예술적 창조성의 자극은 빼어난 작품을 생산하는 재능에 대한 필요한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그에 따른 예술지원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일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책무가 되어야 함(유네스코의 권고는 학교교육 일반과 문화예술교육을 이리한 측면에서 강조)

-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예술지원은 (1)예술을 단순한 ‘도움’의 대상, 위험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상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을 초래, (2)개별 예술지원사업 단위 내에서 예술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사태 초래
- 예술가를 단순히 평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술가가 개인, 사회, 국가, 세계 차원에서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기여를 하는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알리고 예술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는 역할 수행 의무

2. 창작주체와 향유주체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정책구조: 수요자 맞춤형 지원모델로

○ 예술가/국민 일반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정책 개념의 변화: 문화권, 생활문화 등

- 국민으로서의 예술가, 향유자로서의 예술가,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인 예술가,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예술가, 연구자로서의 예술가, 생활인으로서의 예술가, 장애인으로서의 예술가, 여성으로서의 예술가 등 다면적인 정체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의 예술지원, 향유지원, 문화예술교육 등의 정책설계로의 전환
 - 예술생태계 모델을 보완하는 형태로서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모델’ 고민 필요(행정혁신의 출발점, 칸막이식 업무분장과 경직된 지원방식을 넘어선 수평적, 횡단적 행정혁신의 필요, 아래로부터의 예술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또 하나의 원칙)
- 이러한 다면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모델’은 비예술가인 국민 일반을 위한 문화정책 설계에서도 고민되어야 할 사항
 - 문화, 체육, 관광정책 내에서의 통합적인 지원 패키지 서비스(다양하고 복잡한 지원체계 내에서 국민 개개인이 권리로서의 지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공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일선의 지원담당자가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 코디네이터’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횡단성, 연계성, 협력성 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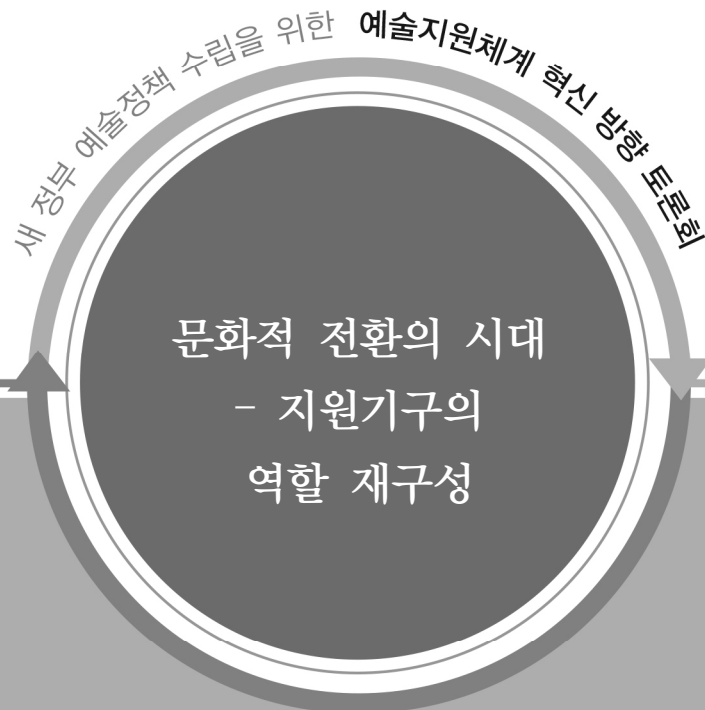
3. ‘사람’ 중심의 정책설계 원칙의 수립과 이에 따른 문화행정의 조직 및 체계 개편

- 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이나 통합적 정책협의 채널은 어디까지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적 문화행정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가(거버넌스가 다시 문화행정 구조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요소로 편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 분야별 진흥이나 지원체계의 증식 등 ‘분할’을 통한 문화행정, 예술지원체계의 확대가 문화정책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노력과 상충하지는 않는가
-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이라는 토건적 발상, ‘시설’ 중심으로 접근이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기(문화시설이 증가해도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하고, 기존의 문화시설이 유희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한편에서 다시 새로운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역설)

- 문화인프라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오래된 인식의 전환 필요
 - ‘사람’이 찾지 않는 문화시설,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서의 문화시설, 결국에는 ‘시설관리’로 귀결되는 유지관리형 문화행정만 남는 사태(예산낭비)
 -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속에서 국공립 문화기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은 어떻게 연계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 필요
- ‘문화인프라’ 개념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
- 새로운 정책 개념이나 영역의 발굴, 지속적인 정책영역 분할을 통해 새로운 지원기관, 새로운 문화시설의 건립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추가되는 상황
 - 보다 더 크고 새로운 문화시설이 있어야만 창작지원과 문화향유, 문화산업이 활성화 되는가, 장르별 문화예술진흥기관, 문화산업진흥기관으로 분업화되어야만 진정한 지원이 가능한가 등의 질문 필요
 - 가장 중요한 ‘문화인프라’는 ‘사람’이라는 정책적 발상 전환의 필요,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문화산업 정책 전반의 정책 및 사업을 감시하는 조정하는 일이 필요
 - ‘사람’ 중심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배분을 위한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상, 정부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문체부의 역할 우선



2부 / 토론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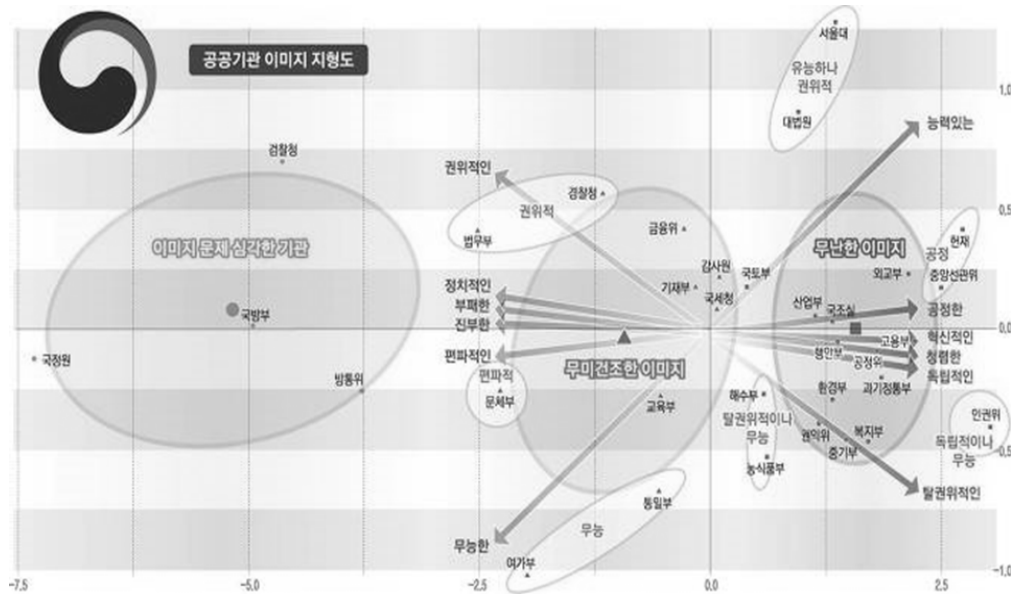
1.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미지- 「공공기관 이미지 지형도 분석」

-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이 갖는 ‘이미지’는 기관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pollab)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은 33개 정부 기관을 ‘능력 있는-무능한’, ‘공정한-편파적인’, ‘혁신적인-진부한’, ‘청렴한-부패한’, ‘독립적인-정치적인’, ‘탈권위적인-권위적인’ 등 6가지 이미지 유형으로 평가함. 주성분 분석으로 도출된 자료를 변수 간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행렬도 분석(Biplots) 방식을 활용해 분석.

(출처 : <서울신문>, [단독] 문체부 ‘편파’… 통일·여가부 ‘무능’… 국방부 ‘부패’ 이미지,

2017-12-04 2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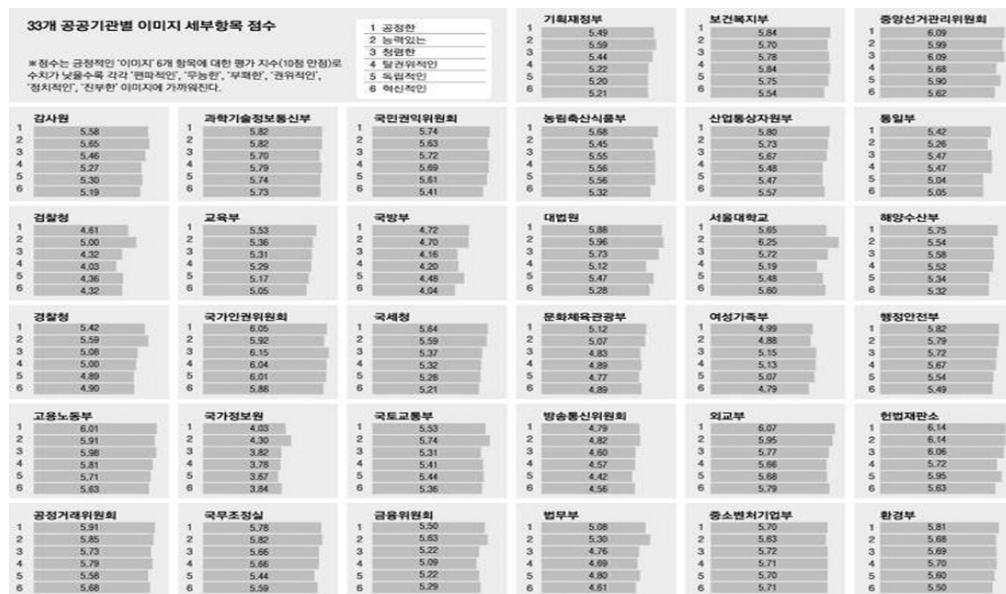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5002002#csidx9b347a8e2500cf8a77ea18e596b6b76>)



- 지형도 읽는 법 : 33개 정부 기관을 ‘능력 있는-무능한’, ‘공정한-편파적인’, ‘혁신적인-진부한’, ‘청렴한-부패한’, ‘독립적인-정치적인’, ‘탈권위적인-권위적인’ 등 6가지 이미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도면에 표현.

- 원점을 중심으로 모두 6개의 축이 양방향으로 뻗어 있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해당 이미지가 강화됨. 원점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축의 반대 축은 ‘무능한’ 축, ‘공정한’ 축의 반대 축은 ‘편파적인’ 축이 됨. ‘청렴한’ 축과 ‘독립적인’ 축이 서로 가까운 이유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대체로 함께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반대로 ‘능력 있는’ 축과 ‘탈권위적인’ 축은 거리가 멀다. 이는 능력 있는 공공기관일수록 권위적인 이미지로 인식된다는 의미.

- 가장 ‘**편파적인**’ 이미지를 가진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임.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가장 ‘무능한’ 이미지로 인식된 기관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임.



- ‘편파적’인 이미지의 문제부가 ‘능력 있는’, ‘공정한’, ‘혁신적인’, ‘청렴한’, ‘독립적인’, ‘탈권위적인’ 위상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수단을 통해 정립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음.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가가 지향하는 예술의 의미와 삶 속에서의 예술의 의미가 어떻게 사회적 담론으로 구조화, 개념정립이 될 것인지가 중요함.
- 따라서 문화예술정책 방향의 혁신을 논하고자 한다면 1) 예술의 정치적, 법적 논거 2)사회에서의 예술의 역할 3) 예술이 개인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인간권리와

- 같은 문화인류학적 논리 5) 경제적 논거 6) 참여, 문화다양성, 사회적 결속, 창조성, 문화민주주의, 문화정체성, 주도문화, 삶의 질 등의 측면 등을 다시 짚어보아야 함.
- ‘다 안다고 생각’하는 문화의 정의[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가치기반경제, 아르요 클라머Arjo Klamer저, 원운선 역, 위니북스, 2017] -를 다시 살펴보면, 1) 인류학적 의미에서의 문화 : 역사, 기대, 유물, 상징, 정체성, 한 집단의 사람들은 공유하지만 다른 집단들과는 구분시키는 가치 함축. 집단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강점이나 외부인들에게는 배타적이라는 이면의 뜻도 지님. 유네스코의 정의는 ‘문화란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한 사회 혹은 한 사회 그룹을 특징짓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 지적, 감성적 측면의 총체’로서 간주되는데, 이는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가치 체계, 전통, 믿음의 방향인 생활양식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임.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의 대상은 예술, 문학에 한정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해 생활양식 일반, 사회적 가치 역시 문화개념에 포괄되면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에서의 정책 요구가 요구되며, “차이에 대한 인정과 차이의 공존”이라는 상호문화성의 요구가 더욱 커짐.
 - 2) 문명으로서의 문화 :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예술, 과학, 기술, 정치, 사회 관습에 걸쳐 축적된 업적의 총체.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성취해 온 성과물까지 망라함.
 - 3) 예술(콘텐츠)로서의 문화 : ‘문명으로서의 문화’의 부분집합. 예술, 때로 디자인, 건축 공예품을 포함하기도 하는 협의의 문화. 건축, 디자인, 기술, 종교와 같은 어떤 특징적인 콘텐츠를 담는 실천에 대한 논의와 연관.
 -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광의의 개념을 택할 경우 정책대상은 국민 모두가 됨. 협의의 개념을 적용할 때 우리는 예술정책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책대상은 예술가, 예술단체, 예술연관 혹은 인접 기관 등으로 범위가 한정됨.
 -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재정립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기왕에 만들어 둔 지원기구들의 설립목적,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함. 이는 문화예술정책의 인식적 기반을 다시금 점검하기 위한 출발이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예술비전에 따른 적정의 미션과 역할, 기능을 찾아나가야 할 것임. 물론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 예술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문화예술지원체계라고 칭한 이유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목적, 적용대상, 기대효과 등은 광의의 문화개념과 협의의 문화개념이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임)

2. 문화정책 가치변화 양상과 정책영역

○ 정부에 따른 문화정책 가치의 변화

구분	문화정책 가치의 변화	주요정책영역
해방 이후 - 제4 공화국 (1945-1980)	- 문화정체성 확립과 민족문화창조 - 문예진흥과 경제발전의 연계	문화유산, 전통문화
제5, 6 공화국 (1981-1992)	- 예술창작역량 제고 - 문화생활기반 조성	예술,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생활, 지역문화시설건립, 통일문화
문민정부 (1993-1998.2)	- 문화복지 증진 - 우리문화의 세계화	문화복지, 국제문화교류, 예술, 문화유산, 전통문화
국민의 정부 (1998.2-2003.2)	- 창의적 문화국가 -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산업, 문화복지, 예술, 국제 및 남북 문화교류, 문화유산, 전통문화
참여정부 (2003.2-2008.2)	- 자율, 참여, 분권기반 창의한국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복지, 문화산업, 예술, 국제문화교류, 문화유산, 전통문화
이명박정부 (2008.2-2013.2)	- 콘텐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일자리 창출	콘텐츠산업, 문화기술,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예술,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문화유산, 전통문화
박근혜정부 (2013.2-2017.4)	- 문화가 있는 삶과 국민행복 - 문화융성	문화협업사업, 자발적 문화영역, 국제문화교류, 콘텐츠산업, 문화기술,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재인정부 (2017.5-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전략] 1. 경제영역 - 과학기술혁신 - 산업혁신 - 사람혁신 : 1) 창의융합적 인재육성 2) 직업능력개발 혁신 3) 온 국민 혁신역량 교육강화 4) 산학연계확대 5) 여성, 청년 인재지원 2. 교육영역 - 유아부터 대학까지 창의융합교육강화 -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 - 온 국민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여성, 청년 인재 성장지원 → 혁신성장기반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 사람중심 의 공정한 경제성장지향,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며 정부는 기술개발, 규제개혁, 지원 등의 역할 강조.	

3. 현행 예술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발제자로부터 제안된 혁신방안

발제자	이원재	이규석	최도인
문제 의식	□ 블랙리스트 사태의 의미 - 문화정책의 이념화 - 예술검열의 정책화 - 문화사업의 사유화 - 지원정책의 통치화 - 문화국가의 무력화	□ 예술지원체계의 문제 - 통합적 정책협의채널 부재, 중앙정부 중심의 위계적 전달체계 - 지원체계의 복잡성, 지원주체 간 불명확한 역할분담 - 지역문화재단 등 중간지원기관의 소극적 책임성 - 예술현장의 참여구조가 배제된 지원체계	□ 예술지원체계에 대한 질문 - 예술지원정책의 역사적 변화? - 예술지원정책 개입 공공기관들의 확대는 어떻게? - 미션, 활동, 방식의 사회적 동의를 이루었나? - 예술정책, 예술행정 누구를 위해 존재? - 예술정책, 예술행정을 지배하는 힘은? - 예술정책, 예술행정은 예술생태계의 어느 곳에 있었나? - 이대로 예술지원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혁신 의제	- 본질적 목표의 전환 - 예술의 개념과 가치 확장 - 주체성의 형성 - 협력체계의 혁신 -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시간 정책의 제도화 - 평가와 성찰이 있는 정책	□ 굿 거버넌스, 협치적 예술지원체계의 구성원리 - 정보공유 - 참여성 - 협력성 □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참여적 문화거버넌스 - 위계적 전달체계에서 수평적 정책네트워크로 전환 □ 협치에서 자치로 이행 - 문화분권에서 문화자치로 - 공공과 민간, 행정에서 현장으로 권한 이양	□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자율성/다양성/창의성 - 공감과 신뢰의 프로세스 - 예술가 시민 & 자치분권 - 예술가의 삶, 지위, 권리,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론화 - 오픈 플랫폼 - 예술기관의 권한과 책임 - 예술행정 논의구조와 문체부 역할
혁신 방향 (실천 과제)	□ 예술정책 외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추진 - 문체부 역할과 조직혁신 □ 현장 예술생태계와의 협치를 통한 주체성과 현장성 확보 - 예술행정의 관료주의 개혁 - 속의 민주주의와 공론장 조성 - 예술위의 (가칭)국가예술위원회로 이행, 예술기관 통합	□ (가칭) 문화거버넌스 설치 □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 기관역할 및 위상 강화 - 문예진흥기금 대체재원 확보 및 지원체계 혁신 - 국비, 지방비 매칭을 통한 중앙, 지역간 협력형 사업 추진방식 전면 개편 □ 분권형 예술지원체계 - 사업, 예산 권한을 중앙→광역→기초로 이관 - 기초-생활권 단위에 기획권한과 포괄적 예산 집행 여건 제공 □ 민간 거버넌스형 정책패널 제도 □ 문화예술분야 참여예산제도 □ 지원사업 심사제도 개편	- 예술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 예술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예술위원회 사업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 어떻게 신뢰시스템으로 개혁할 것인가? - 예술위원회 비전은? - 문체부의 역할은?

4. 토론을 위한 질문(이자 제안)

- 어느 시인의 글로부터 토론에 임하는 마음을 다져봄.

가장 이상한 세 단어 Trzy słowa najdziwniejsze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내가 "아무 것도"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결코 무(無)에 귀속될 수 없는
실재(實在)하는 그 무엇인가를.

– 비스와바 씬보르스카, 〈씬보르스카 시 읽는 저녁〉 중 ‘키워드 1 언어의 한계성에 대한 자각’에서 –

- 국가는 예술(가)를 왜 지원하는가?
 - 이원재, 최도인, 이규석 모두 현행법과 현 정책실현 시스템의 문제를 국가주도와 개입으로부터 출발.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지 못한 ‘국가의 인식수준’을 지적하고 있음.
 -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수준에 따라 예술정책과 예술행정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가의 정도를 보여줌.
 - 결국 우리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비록 ‘답’이 불변의 정답이 아닐지라도 현재, 이 시점에서의 ‘최적’의 합의를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문학 작가 톨스토이는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며,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참된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라 강조함.

경제학자 클라머는 예술은 단순히 예술가의 소유물이라고 하거나 작품을 사는 사람의 것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예술은 예술로서 공유될 때 예술로서 존재한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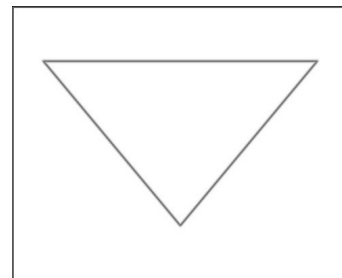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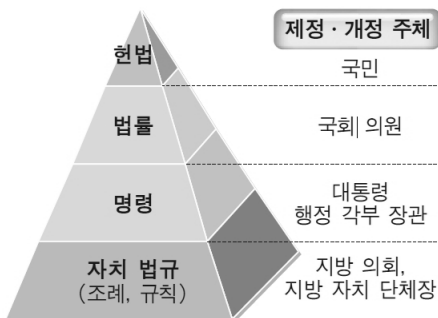
○ 문화예술지원의 근거가 되어 온 문화예술 관련법 현황

제정	문화기본법	'13.12월	문화권, 문화영향평가, 문화인력양성 등
	지역문화진흥법	'14.1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14.1월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인증, 예우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4.5월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5.5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개정	예술인 복지법	'14, '16년	산재보험 가입, 불공정행위 제재, 서면계약
	문화기본법	'16.5월	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

제정	인성교육진흥법	'15.1월	(교육부)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육성, 국가사회발전 이바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05.12월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지원, 활성화,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6.2월	(문체부/교육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창의적 인재 양성, 삶의 질 개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06.4월	(문체부)영상산업진흥, 지역영상문화진흥, 지역주민이나 지역영화관련단체 사업과 활동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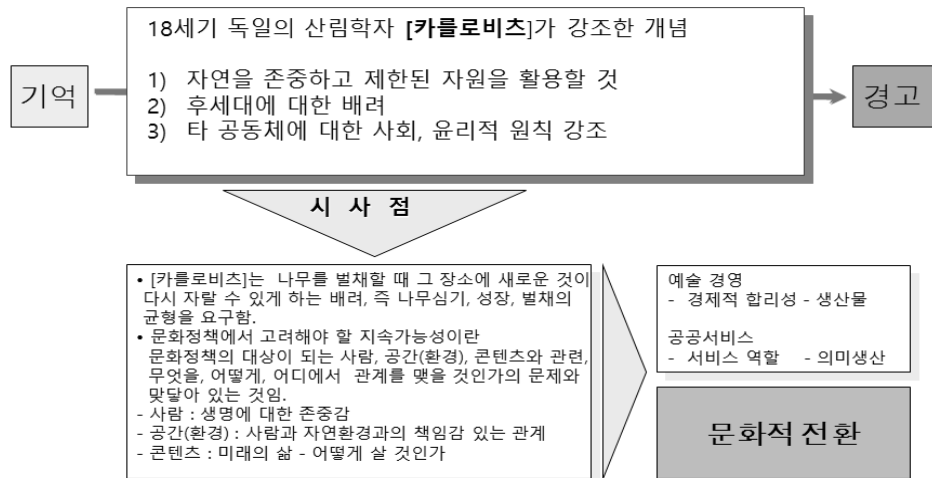
- 법은 정의 실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결과와 행위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됨. 이때 ‘정의’란 ‘모든 사람, 다시 말해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라 함.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되는 것임.

문화예술 관련법은 대부분 규제의 성격보다는 촉진의 성격이 큼.(문화제와 관련된 법은 규제의 성격이 큼) 법에 명시된 기구설립에서부터 지원의 법적 경로, 평가, 환류 등의 책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인 등에게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됨.



○ 문화적 전환의 필요성

- ‘누구나 알고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카를로비츠가 강조한 개념인데 문화정책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사람, 공간, 콘텐츠와의 관계 맺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인식, 이에 대한 문화적 전환이 현재의 예술지원체계 논의의 인식적 근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거버넌스의 이해에 대한 재이해

-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정도가 거버넌스 인가?
- 거버넌스 속에 민간(기구)이 들어가면 권한이 생기는가? 그 권한을 행정에 끌려가지 않고 잘 쓰고 있는가? 혹시 행정과 좋은 관계 유지를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가?
- 혹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마다 기구를 만드는데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 혹은 자리가 혼잡이 되는 것일까? 그런데 ‘그들은’ 누구지?
- ‘그들’이 아닌 ‘우리’가 기획하는 단계부터 같이 권력을 구성해야 함.
- 행정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라 행정이 민간(기구)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민간(기구)은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은 동원관계가 됨. _지역에서의 프로그램 수행 피곤증 증가, 프로그램 소비화, 지역단위 조직의 자력화가 어려운 현실. 혹시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노예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참여와 분권의 주장은 관료주의 혁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 시스템의 규칙을 밑에서부터 위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 유착관계의 단절, 분권 힘의 분산 적절한 규형과 긴장의 필요?

○ 지원기구 간의 역할의 재구성

- 문체부는 2017년 현재, 본부와 18개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의 공공기관과 지원을 받는 법인 단체 9개 등 산하기관이 44개임.
- 이 기관들 중 예술(가)지원기구로 알려져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생활문화진흥원 등의 사업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예술 활동 및 예술가(단체) 지원과 밀접한 기관들이며, 혁신적인 예술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임.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7년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략목표 및 과제

4대 전략목표	14대 전략과제	46대 실행과제
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	① 창작에서 확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01. 문학 지원 패러다임 전환 02. 위축된 문학 시장 활성화 03. 시각예술 지원 패러다임 전환 04. 시각예술 전용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05. 공연예술 창작산실 강화 06. 공연예술 창의인력육성과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② 창의적 예술인력 육성	07. 차세대 창조인력 집중 육성 08. 문화예술 현장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확대 09. 창의예술인력센터→공연예술 창작스튜디오로 역할 확장
	③ 한국예술국제교류역량강화	10. 국제 주요 플랫폼 협력지원 확대 11.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창작레지던스 파견 내실화
	④ 예술극장 운영성과 창출	12. 예술극장의 창작산실사업 거점화 13. 예술현장 및 관객 중심의 예술극장 운영 강화
	⑤ 문화예술 아카이브 강화	14. 예술자료 수집 및 컬렉션 구축 강화 15. 예술기록 디지털 구축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문화나눔 사업 고도화	⑥ 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수준 제고	16.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17. 전략적 사업홍보를 통한 카드 발급·집행률 제고 18. 가맹점 확대 및 우수 문화상품 개발 19. 사업 모니터링 강화

4대 전략목표	14대 전략과제	46대 실행과제
	⑦ 공연·창작나눔사업 확대 및 세분화	20. 공연나눔사업 고도화 21. 창작나눔사업 세분화 지원
	⑧ 문화융성 국정과제 이행력 강화	22.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실행기반 강화 23.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내실화 24.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효율화 25. 생활 속 인문정신 가치확산 사업 다각화 26. 국민 여가생활 촉진 위한 기업참여 활성화 27. 생활권 중심의 공공미술사업 추진
예술가치 대외확산	⑨ 공연예술 관광자원화	28. 지역 대표 공연예술 브랜드 육성 강화 29. 전통예술분야 우수 콘텐츠 관광자원화
	⑩ 문화예술 후원문화 확산	30. 후원을 통한 자생적 재원조성 및 모금역량 강화 31.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대규모 후원 유치 32. 모금 총량 확대를 위한 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33. 문화예술 소액후원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⑪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	34.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35.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전략적 추진기반 조성	⑫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전략 수립 및 운영	36. 효율적인 기관 경영전략 수립 37. 문화예술 정책연구 활성화 및 정보 확산 강화 38.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활용 39. 전사적 경영선진화 추진 40.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현안 해결
	⑬ 성과지향적 평가체계 관리	41. 대내외 평가제도 운영 내실화로 성과 제고 42. 전사적 고객만족 경영 및 책임경영 강화 43.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으로 정부3.0 실현
	⑭ 경영관리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44.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 제고 45.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강화 46. 기관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안정적 운영

2) 생활문화진흥원

○ 미션

- 국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 속 문화 참여 기반 조성

○ 비전

-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가꾸는 일상

○ 전략목표 및 과제

-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 생활문화체감 확산을 위한 문화 참여 기회 확대
 - 생활 밀착형 문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 간 생활문화 교류 프로젝트 지원
 - 전국생활문화제 개최
-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제고
 -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인력양성
 -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기관·단체 협력 지원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가치 확산
 - 생활문화 자원 조사·연구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
 - 생활문화 정보 플랫폼 구축
 - 국제 협력 및 해외 교류

3)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미션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비전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과 기반 구축을 선도

○ 핵심가치

- 향유와 공감
- 소통과 협력
- 지속과 성장

○ 중점방향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재고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선순환 구축
- 기관 경영 혁신

4) 세 기관의 비전, 사업대상 및 지원(향유) 대상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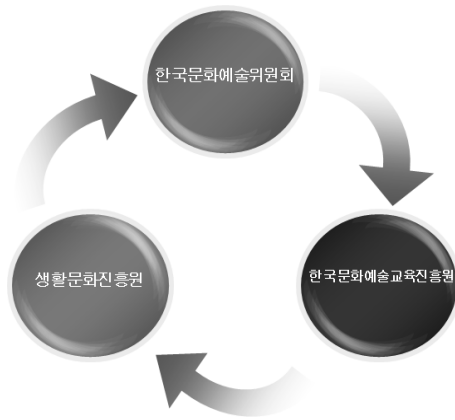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창조,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 기초예술분야, 실험영역분야의 예술가(단체) 지원
- 생활문화진흥원 : 국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 속 문화 참여 기반 조성임ission.
→ 지역문화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문화사업 수행.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권 확대와 연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전 국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예술가(단체), 예술강사의 지원.

○ 그래서 만약 역할을 이렇게 재구성 한다면?

- 가장 안정적이고 단단한 정책방향 조타수 역할의 문체부
 - 정책공급 및 결정권의 분산으로서의 중간예술지원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생활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현장에서의 융통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행기구로서의 광역/기초문화재단
 - 중간예술지원기구로서의 세 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
-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예술담론 및 정책생산, 예술(가/단체) 및 비영리 실험예술 지원기구로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 문화기본권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지역의 기본역량 및 지역특화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는 '생활문화진흥원'(생활문화+문화마을문화도시+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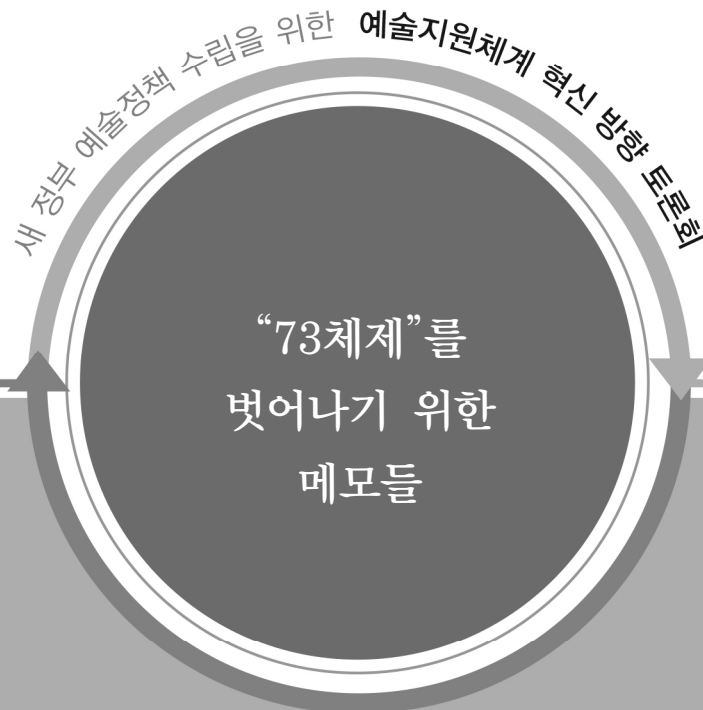
+학습공동체 기반의 사회문화교육)

- 3)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원체계의 핵심 기구로 3 기관의 업무 분리 및 각 기관의 적절한 힘의 균형과 긴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2부 / 토론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1. 예술정책에 대한 의문 - 국가는 예술(인)을 왜 지원하는가

-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법, 제도) - 문화예술진흥기금(재원) - 문예진흥원(집행기구,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 본질적 차원에서 프레임이나 논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예지원의 근거가 갖고 있는 국가 중심의 문화예술인식(“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 국가주의 & 성장주의
- 예술이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성장하거나 발전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며 정반대의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함
 - (문화)예술은 통치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교란시키거나 전복하는 상상력을 통해 공동체에 복무해왔다는 점
- 국가주도형 & 성장 중심의 예술정책의 문제점
 - “좋은 예술”, “건전한 예술”이라는 권력 입장에서의 예술에 대한 위계화의 위험성을 내포(차별, 배제의 위험성, 블랙리스트와 같은...)
 - 현실적으로 현대 국가에서 국가권력이 중심이 되어 예술을 성장시킬 수 없으며 국가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것(비현실성)

2. 예술지원의 논리의 변화

- 국민기본권리로서의 예술(창조)권을 근거로 삼아야 함
 - 문화기본법에서 문화권 서술에서 국민의 예술창조 권리를 자유로운 문화창조의 권리로 이미 인정하고 있음(“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 예술지원의 기본적 논리구조를 국가주도성장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문화창조권 측면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예술에서 개별적 국민들의 문화와 예술로, 민족 단일성에 기반한 총체적 문예진흥의 원리가 아닌 국민의 다원성에 부합하는 예술의 다양성으로, 국가와 행정이 주도하는 행정주도 예술지원이 아닌 예술인과 시민자율성을 보조해주는 보충성에 입각한 예술행정으로

3. 문화예술지원체계의 난삽함

- 예술, 문화향유, 문화산업 등의 구분들이 유효한가
 - 과거 전통적 예술 중심의 지원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적 지원구조가 추가되어 왔지만 문화생태계 안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역동적 관계맺음이 간과되어 왔음
- 어쩔 수 없는 행정적 칸막이를 인정한다고 쳐도...
 -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적 구조의 구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예술정책의 집행구조는 지나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구조에 맞춰져 있음
- 문화부의 조직구조를 예술생태계의 구조에 따라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맞추란 것도 비현실적
 - 행정구조는 안정적 보수성을 통해 유지될 필요가 있음(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 아님)

4. 중간지원조직을 큰 그림 속에서 재구성

- 2000년 이후 지원조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주무부처의 정책 수요에 따른 것
 - 필요성은 각각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정책의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업무 중복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닌 가시적 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유사한 업무 간에도 협업이나 네트워크가 불가능한 상황

-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문화분권 구조에 적합한 시스템이 아님
 - 실-국-과-지원조직으로 내려오는 정책사업들이 현장으로 난삽하게 내려꽂히는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함
- 현재 예술지원과 관련해서 이뤄지고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사업들을 아랫단부터 성격을 정리하여 다시 성격에 맞게 정리하고 이에 따른 지원조직의 업무를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예술지원정책사업은 너무 많은 목표와 정책효과를 담고 있는데 실상 이것은 그 내용 없음을 반증하는 부끄러운 일면임
 - 기관과 사업의 미션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예술(창작환경)지원과 예술인복지는 다른 맥락에서 다뤄져야 하는 정책임
 - 예술인복지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연장선에서 예술행위라는 사회적 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보완하는 사업으로 한정
 - 단 예술인복지의 대상은 예술 활동으로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현역전업예술인들로 국한시켜야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예술가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5. 현재의 성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 신공공관리 행정의 근원적 문제
 - 신공공관리 행정은 기본적으로 경영적 측면에서의 성과관리 중심인데 이는 행정의 민주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독선적 편이주의가 지배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한국 예술행정의 현실상이 정확히 그러함
- 신뢰할 수 없는 지표, 신뢰할 수 없는 성과가 남발되는 것을 부추키는 시스템임
 - 객관성과 계량화를 동일시하는 것의 함정을 벗어나야 함
 - 성과관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제가 있어야 함, 정책의 구체적 지향을 담 아낼 수 없는 상태에서, “잣대”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의 성과 관리는 자원낭비임
 - 실제 행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평가에 대해 아무도(현장이건, 행정이건)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 설계의 기반이 되기도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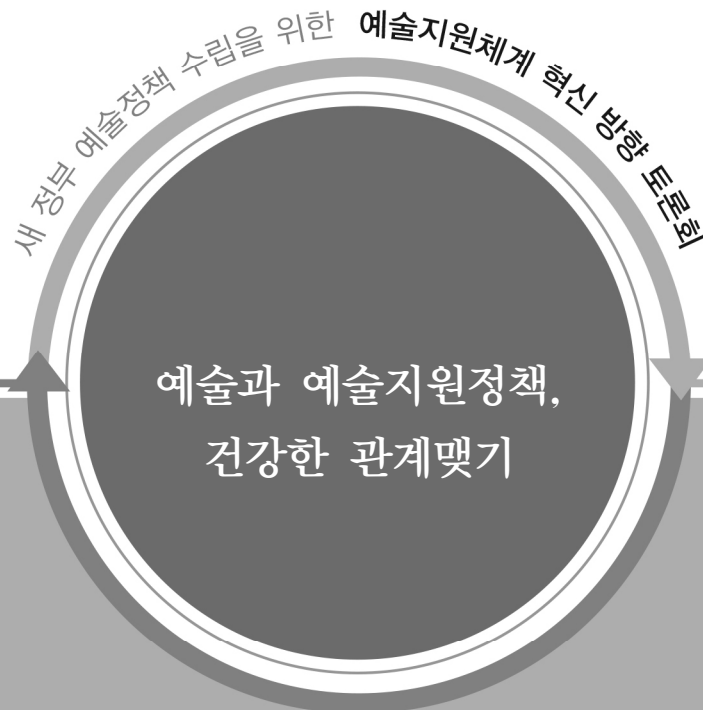
- 예술행정에 있어서 성과평가 영역에 대한 전면적 시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 플랜을 세울 기틀을 만들 수가 없음

6. 예술인 정책을 세워야 할 때

- 예술인정책을 다시 구성해야 함
 - 지난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술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있어야 함
 - 단 이것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술을 좌지우지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예술에 대한 태도(attitude)를 세워야 한다는 의미임
-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했지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문화현장을 다시 되살리며 국가에서 예술에 대해 가져가야할 기본적 태도를 명시적으로 정리한 선언을, 정권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예술에 대한 약속”(권리장전?) 같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부 / 토론



이동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예술정책은 예술과 작동기제가 엄연히 다르지만,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예술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예술활동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 주요 요인이다. 일관성 있는 예술지원체계와 정책 추진에 대한 준비의 요구와 예술생태계의 지속성이라는 화두는 예술현장의 일관된 목소리다. 정책은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성과측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다시 현장으로 환원되어야 의미 있는 유기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정책예산 편성부터 금액배분까지, 현장으로부터의 소구점 수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은 정부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기조에 따른 부수적 존재로서의 혁신의 대상도 정치적 캠페인 수단도 아니다. 그간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문화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되어 왔다. 문화예술 그 자체의 숙성과 성숙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한 철학적인 비전이 담긴 예술정책 그리고 긴 호흡을 바탕으로 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기이다. 정부 기조에 따라 지원방식이 변화하기도 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조는 계속 바뀌지만 지원 사업들은 이전 방식을 고수하며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예술과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현 시점에서 정책의 근간에 담겨야 할 문제의식들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예술과 예술정책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다양한 관계맺기를 지원하는 매체로서의 예술기관과 공간

전통적으로 ‘예술가’로 지칭되는 소수 창작자들의 생산과 이를 경험하는 다수 관람자들 사이의 매개라는 역할에서의 문화예술플랫폼 기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플랫폼의 역할은 결과물의 공유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참여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네트워크 개발과 운영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예술정책을 논할 때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작품창작과 발표에 대한 지원/평가 체계가 현장 프로덕션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 개념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지원 예산의 원활한 관리가 중점이 되어온 기존의 지원제도 운영관점에서 벗어나, 창작 프로덕션 과정의 순탄한 흐름을 협력·지원하는 측면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특정 산출물을 육성하기 위한 것에서 예술활동의 참여주체들과 문화자원들의 밀도 있는 관계 맺기라는 확장

된 개념의 예술정책 수립과 운영이 시급하다.

현재의 지원체계는 작품 배급 형태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 형성을 훨씬 더 중요시해야한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공간이나 조직을 통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이나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고민이 예술정책에 담겨야 한다. 생산과 소비를 통한 예술의 공유라는 시각에서, 예술이 지닌 총체적 가치에 대한 관계 맺기로서의 예술과 예술활동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술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술생태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의 예술정책

예술과 예술정책의 건강한 관계 맺기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활동의 ‘주체’, 예술정책의 ‘맥락’ 그리고 ‘문화자원’의 공유에 대한 다층적 시각에서의 고민과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예술활동지원 및 예술인복지제도는 이러한 공동체의 숙의의 결과가 반영된 큰 틀에서의 예술정책의 한 조각을 접하는 것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책의 부분적 손질로서는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지하고 있다.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라는 이유로, 정권의 법적 수명시한에 맞춰진 성과창출이란 이유로 그동안 외면해왔던 근본적인 논의들을 어렵지만 이제라도 정책이라는 구체수단으로 담아내는 것이 예술과 예술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현장과 정책이 따로 논다라는 비판은 곧 그동안 둘 사이가 공존하지만 상생하지는 않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예술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공정상생 생태계 실현은 현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바탕으로 한 대안찾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상품/서비스의 유통과정과 맥을 같이하는 생산(창작)과 소비(향유)라는 분리된 2가지 체계구성 관점은 자본 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적 관계 전체를 시장경제적 관계 아래로 재편해 온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단이다.

자연생태계와 달리 인문생태계는 먹이사슬이 아닌 복잡한 가치사슬로 연결되고 작동된다.

예술생태계는 공동체에 예술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예술의 가치와 활동이 사회공동체 전반에 걸쳐 어떻게 인식되고 공유되는가에 대한 작동기제의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예술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공동체의 일부 한정된 문제에 대한 목적적 합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의 상품성 논리가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공유사슬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예술생태계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생태권)안에서 다양한 영역의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하는 관계사슬의 한 축이다. 직업으로서의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구분에서 벗어나, 작가는 시민, 크게는 국민 모두를 예술과 관계 맺기 시키는 전략, 예술창작에 직접 참여시키는 전략, 이러한 활동이 일상공간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예술창작육성을 위한 시설·조직·정책과 정치·경제·사회·교육 각 분야의 그것과 다양한 방법으로 연동되어 운영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술이 사회공동체의 중요한 근간가치로 인식되고 예술을 체득하기 위한 절대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문화적 토대 위에서만 건강한 예술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예술작품이 재테크용으로만 소비되는 사회문화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의지와 실천이 뒤따를 때 가능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등 예술정책기관의 역할

- 기금사업 운영방점에서 현장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의 매체로의 역할강화
- 국내외 예술(예술자원)교류의 실제적 플랫폼 역할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은 예술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공모-선정-집행-정산, 최대 10개월)의 지원기금사업단위로 현장과 관계맺기하는 현 구조에서는 창작과 향유를 떠나 근본적으로 현장의 소구점을 지속성을 가지고 담아낼 수 없다.

실효적이고 지속성을 담보한 예술정책 수립과 운용에는 단위별/영역별 예술정책과 제도운용에 대한 기본 자료를 도출하는 현장 리서치와 중장기 전략수립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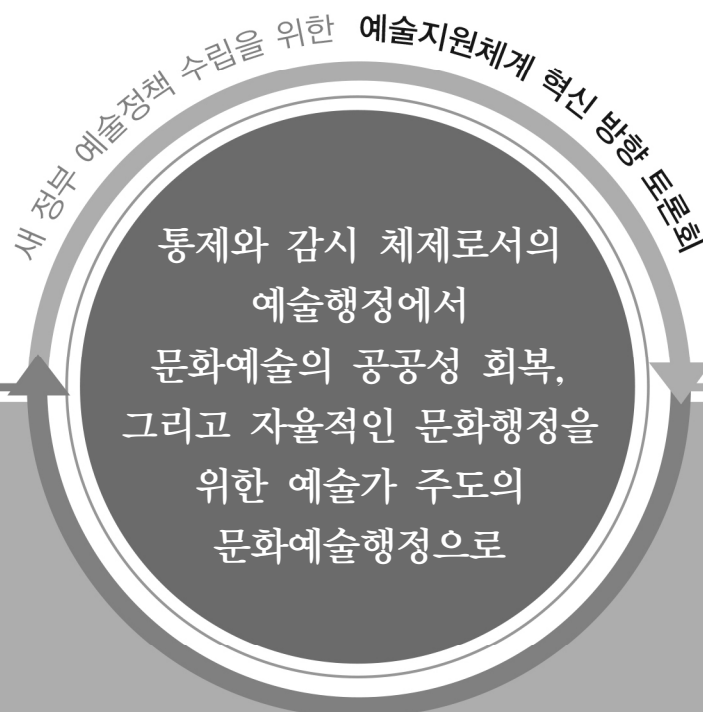
이에 지역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기의 트렌드 이슈에 집중하는 개별 사업수립과 전개에 편중된 기관운영과 더불어 기관간 업무의 편의적 나누기와 중첩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문화재단은 해당 권역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예술정책 기반자료조사라는 리서치 작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이를 필요 정책으로 풀어내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각 지역문화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예술정책집행기관들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제적인 기능적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예술정책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개별 사업단위와 사업비배분이라는 측면으로 운영되는데서 비롯된 영향이 크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국가문화예술정책의 주요 이슈인 해외예술시장 개척의 경우도 국내에서의 창작과 해외예술시장 개척을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고려하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복되는 제자리걸음을 면할 수 없다. 일례로 해외시장개발이든 공동제작교류이든 국내외 창작프로덕션에서 프로모션까지 기관들의 다각적인 연계지원을 통한 내용의 확대(scene의 확장)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에 왜곡된 행정편의상의 지원 다각화로 인해 기관별 분리된 단위사업 가동과 성과 측정 그리고 기관별 경쟁이라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예술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정책자금의 집행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지닌 공공이라는 신뢰개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예술활동의 프로모션 매체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예술정책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가능 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예술지원체계의 혁신에 반영되어야 한다.

2부 / 토론



임인자

(독립기획자,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1. 검열과 통제 속에 파행으로 일관된 문화예술행정 체계에 대한 반성 필요

- 청와대-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국정원과 연계된 검열의 시스템 체계
 - 문화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 학문에 대한 사상의 자유 등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등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시하에, 정무수석실 주도로 문화교육수석실 등을 통하여 문체부에 블랙리스트를 하달하고, 문체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극단 등 각종 검열 및 배제 업무로 문화예술 모든 기관의 운영이 장기간 파행적으로 이루어짐.
- 자율성과 독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립과 정신을 뒤흔드는 파행
 - 1973년 문예진흥법을 근간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화한 이유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참여, 자율, 분권>이라는 가치아래,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예술가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존중받는 예술지원정책을 위해 기관이 변경한 것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기관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가치를 행정으로 옥죄 것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근간을 흔드는 파행이 이루어짐
- 최근 김기춘, 조윤선 등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에 대한 재판 (일명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밝혀지는 것은 국가가 검열 통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결국 청와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권력 관계에 대한 재점검이 절실함.
 - 대부분의 배제 지시는 전화 혹은 팩스나 이메일로 이루어졌고, 정무수석실에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정무리스트가 문체부로 하달되고 이후 논란이 되자 그것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그 후 은폐의 방식으로 철저히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가 내려졌음
 - 심지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중 일부는 재판장에서 예술가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면서도, 만일 예술계에서 이 사실을 알지 않았고 공론화 되지 않았으면, 조용하고 쉽게 일처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음

-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저항하고 검열 및 블랙리스트 사건을 알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주기적으로 검열 및 블랙리스트 배제가 이루어졌고, 2014년 말, 2015년까지 지원심의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배제 사유에 대해 공식 자리가 아닌 사석이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발언했던 것을 2016년의 경우 지원자 전체 리스트에 ‘음영 처리’나 ‘다른 배제 기준’들을 ‘개발’하여 배제 업무를 실행하였음. 결국 독립성과 자율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청와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권력 관계에 대한 재점검이 절실한 상황임.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절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는 우선적인 가치를 스스로 망각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은 이러한 배제 지시와 행위에 대해 “재난”에 가깝다고도 증언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증언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범죄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 직원들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절에 입사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변화,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 기금 고갈에 따른 타 기관 의존도 심화 상태에 있었음.
 - 이러한 ‘경로의존성’에 따라 문체부의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사무처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술가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음. 심지어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심의 위원들과 사전 협의도 하였지만, 지원배제 사유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며, 기망하였음.
- 결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성 확보 및 고갈되는 기금 문제 해결 등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이 절실한 상황임. 이는 단순한 기관 체계 문제가 아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와 위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어야 함.

3.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선임 과정에 대한 비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이 중요한 상황에서 최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현 한국문화예술위원 선임 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은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 최우선이며, <참여>라는 가치 부여도 최우선 적인 고려사항임. 따라서 장르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여성, 장애인, 지역, 세대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고려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신입위원 선임 결과는 처참하기만 함.
 - 예술가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바람을 뚫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 구현은 첫 번째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제 해결에 있지만, 어떠한 비전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료됨.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떠한 개혁을 해낼 것인지 모든 예술계가 주시하고 있음.
 - 심지어, 기사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4명의 위원은 장관에게 위임했다고 하여, 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어디에 있는지 분노케 하였음. 위원들은 왜 그 자리에 선임되었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떤 가치로 운영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기를 강력히 제언 드리며, 문제제기 하고자 함.

4. 중앙과 지역의 상호 보완적이고 생태를 고려한 예술행정체계와 사업의 필요

- 중앙에 집중된 문화예술행정 체계, 지역과의 불균형
 - 많은 문화예술관련 사업과 인력이 중앙에 집중된 도시산업화의 그늘
 - 중앙과 지역의 각각의 특수한 환경의 문화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자생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
 - 지역에 대한 분권과 자율성을 강화해야함.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을 배제하기 위해 지역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지역에 이관하면서, 이를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검열과 통제의 명분으로 이용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지역의 문화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는 문화예술정책의 시정 필요
 -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는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환경 보다는 지원기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상태임. 게다가, 지원방식과 형식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 확보 보다는 공공 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상태가 가중되면서 지역 민간 예술단체들의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은 매우 요원한 상황임. 중앙에 집중된 간접 지원 단체 및 시설 역시도 (예.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지역에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나 사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형식이 그대로 지역에 이관되는 형태임.

- 또한 지역의 특수성이 잘 연구되는 형식이 아니므로, 서울의 사업이 그대로 추진이 되면서, 양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갖기 어려운 상황임.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지원체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으나, 이는 ‘건전 단체’와 이른바 ‘문제 단체’를 감별하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실태조사였으므로 더욱 파행이 지속되었던 상황임.

○ 중앙에서 검열과 통제를 통한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지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자자체장에 따라 좌우지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 지역기초재단의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장치 마련이 요원한 상황임.
- 따라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으로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은 강조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등 누구의 정치적 견제 없이 예술지원 및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마련이 절실함.

5. 문화예술의 공공성 회복과 자율적인 문화행정을 위한 예술가 주도의 가치 체계 마련 절실

○ 통제와 관리를 위한 문화예술행정의 지속으로 예술가들은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예술활동 자체가 불가능하였음.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의 형식에 대한 실험 분야 (다원예술 등) 폐지, 소통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인 웹진 등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음.

- 민간예술단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국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하게 됨 (예. 공연장상주지원사업 등). 이에 따라 예술인들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예술활동은 불가능 하고, 공공기관의 요구나 입맛에

따라 관리되고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음.

-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문화예술 형식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던 다원예술 분야와 같은 분야는 폐지되었고, 소통과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아르고 웹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진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음.
- 민간 주도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다원예술지원 프로그램, 웹진 등 소통 가능한 창구의 축소를 해지하고 활발한 예술 담론과 비평과 실험이 가능한 체계를 복원하고 강화하여야 함.

○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운영 체계를 통하여 훼손된 공공성 회복 및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실현

-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에는 “빠앗긴 극장, 여기 다시 세우다”라는 모토로 임시공공극장 ‘블랙텐트’가 설치되었음. 이 ‘블랙텐트’에서는 국가가 삭제한 ‘위안부, 세월호,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의 목소리와 연극, 무용, 마임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극장에 담아내려는 노력이 있었음.
- 블랙텐트는 설치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이 ‘공공’의 역할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극인, 해고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지었고, 극장 설비 및 시설 등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 십시일반을 통해 시설을 구했고, 운영하였으며, 극장 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안 각자 역할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스텝으로 참여하였고, 관객들은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에 의해 입장이 하였고, 무료로 공연이 되었으며 후원 형태로 수입은 발생하였다. 공연료는 후원받은 금액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작품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성 회복’이라는 가치를 두고 운영자나 참여예술가, 관객 모두 ‘공통의 가치’를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극장을 운영하였음.
-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스스로 ‘공공성’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성이나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공공성의 가치들이 ‘극장’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담론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그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음.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및 예술행정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국가 독립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제안 : 국가 인권위원회 모델로 전환)
 -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념, 성별, 소득, 장애, 질병, 나이 등에 차별없이 다양한 가치들을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위원 선임 과정 및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현재 11인 위원회를 법에 근거한 15인 위원회로 증설하여 장르, 성별, 세대, 장애 등 다양한 가치 구현 토론 개선
 - 또한 사무처 내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뽑은 사무처 직원 1인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함. 단 정권에 의해 개입되는 인사가 아닌 사무처 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참여. 이의 취지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지 활용 취지가 아님. 그러나 노동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용자 입장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함.
 - 현재 자기추천으로만 이루어진 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전면 검토
 - 위원회-사무처 구조로는 국가 권력의 개입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므로, 3자 체제에 대한 검토 필요 (감사 제도 재검토, 옴부즈만 제도 재검토)
 - 소위원회 구성 : 전체 위원회 이외에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이를 위해서 현재 소위원회가 위원들로만 구성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아닌 다양한 예술가 및 예술정책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제도 재검토 : 현재 국가기관 소속 장 및 대표이사 주변인사로 이루어진 이사제도 재검토 하여, 다양한 예술가 (성별, 나이, 장애, 지역 등 고려)의 참여 이사제로 전환해야 함.
- 통제와 감시의 정점인 ‘e-나라 도움’ 폐지

- 통제와 감시를 위한 체계가 심화되었고 결국 ‘e-나라 도움’이 실행 중. 기금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예술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나, 현재는 주객이 전도된 통제의 정점으로 작동하고 있음. 현재 한 연극인의 제안을 통해 청와대에 폐지 청원중임.
-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공간들을 예술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조로 개선 제안.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간의 경우 원래 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취지에 걸맞게 공공자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 제안 (예.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인사미술공간 등)
-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로 변화해야 함 : 기존에 블랙리스트는 특정 예술가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말살정책으로 일관하였음. 심지어 인력 지원사업 등에서도 배제 행위가 이루어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체제로 신진, 중견, 원로, 성별, 지역 등의 다양한 검토와 생태계 환경 검토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함. 무엇보다 학살에 가까운 검열과 블랙리스트 정책에 대한 반성을 담아 지원체계가 재검토되기를 소망함.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혁신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모든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지난 검열과 블랙리스트 등 통제로 감시로 일관했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고 다시 체계를 회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부 혁신을 위한 내부 소통의 자리와 간담 등을 다양하게 활성화하고, (가칭)내부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파괴된 신뢰와 예술가들의 고통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점검과 반성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촉구함.

